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일시 2023년 5월 4일(목) 오후 2시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주최 국회의원 이인선·국회의원 윤창현
여의도연구원

주관 바른사회시민회의

목 차

개회사

이인선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	4
윤창현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	6

인사말씀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8
------------------------	---

축 사

김기현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_당 대표.....	10
윤재옥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_원내대표.....	12
박대출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_정책위의장.....	14
임이자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_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16
한무경 국민의힘 제21대 국회의원_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18
김문수 국민의힘 전 국회의원_경제사회노동위원장.....	20

세션 1 | I. 고용 위기

발제	제: 고용위기, 원인과 대책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25
종합토론:	천양하 용인대 시학부 교수.....	53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55

세션 2 | II. 산업 · 에너지 위기

발제 1 :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서의 정책과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61
발제 2 :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77
지정토론:	조성봉 숭실대 경제학과 교수.....	99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103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107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16

개회사



이인선

제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대구 수성구를 국회의원 이인선입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에 함께 해주신 전문가분들과 내외빈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아울러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 애써주신 윤창현 의원님과 여의도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한일관계파탄,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세금폭탄 등 문재인정부의 정책실패로 인한 피해로 대한민국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는 문재인 정부가 망쳐놓은 정책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로 세워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위기를 현명하게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회복시키고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과 금융, 서비스, 공공 등 3대 분야 혁신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고 민간중심으로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은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보다 윤석열 정부를 깎아내리고 발목 잡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국가 재정 건정성 회복 및 국가 신용도 향상을 위한 재정준칙 법

제화, 글로벌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공급망 기본법 등 나라 경제의 명운이 달린 법안들이 야당에 발목 잡히고 있습니다. 반면,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등 절차적으로나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은 악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 현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를 가감 없이 평가해보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올바른 고견과 평가들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 토론회를 함께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4일
국회의원 이 인 선

개회사



윤창현

제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국회의원 윤창현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에 참석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이하여, 우리나라의 경제 상황을 짚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직면해있는 위기를 분석하고, 그 해법을 모색해보는 귀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의미있는 행사를 위해 애써주신 존경하는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님, 박수영 여의도연구원 원장님 그리고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양준모 공동대표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 말씀드립니다.

우리나라가 직면한 고용위기의 원인과 그 대책을 주제로 발제를 맡아주신 사회디자인연구소 김대호 소장님과 열띤토론에 함께해주실 용인대학교 천양하 교수님, 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이석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글로벌 공급망 위기 속 우리의 대응 방안에 대해 발제를 맡아주실 경희대학교 정범진 교수님과 연세대학교 양준모 교수님, 그리고 토론에 임해주실 조성봉 숭실대학교 교수님,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바른사회시민회의 박인환 공동대표님 그리고 한국기업법연구소 황인학 선임연구위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전 정부가 추진했던 주요 경제정책들이 나비효과가 되어 현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

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실패한 정책임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은 ‘경제성장으로 국민소득을 증대시킨다’는 기존의 틀을 과감하게 파기하고 ‘국민소득을 증대시켜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파격적인 실험이었습니다. 경제학만 40년 가까이 연구한 학자들도 처음 본다고 입을 모았던 신기하고도 위험천만한 발상이었지만, 이전 정부의 강한 확신으로 경제학 이론을 재창조했던 재정주도 성장이론입니다. 이전 소득의 확대로도 근로·사업소득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자신했던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의 주장이 무색하게 경제정책의 결말은 ‘막대한 국가빚’으로 이어졌습니다. 지난 정부 출범 당시 680조원 수준에서 5년 동안 두배 가까이 늘어나 2022년 기준 1,068조원에 이르렀으니, 국민 1인당 2천만원 정도의 빚을 이고 사는 셈입니다.

현실성 없이 무리하게 추진된 건 ‘탈원전’에너지 정책도 마찬가지입니다. 끝없이 오르는 전력 생산단가는 무시하고 준비없이 가동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남은 건 ‘중금속 덩어리’ 폐태양광패널이요, 손쓸 수 없이 늘어난 한전 부채였습니다. 지난 5년 동안 한전은 26조원에 가까운 손실을 입었습니다. 한전이 전력 구매를 위해 추가로 지불한 비용만 12.7조원에 이른다는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도 있었습니다. 문제는 지난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신고리 5·6호기 가동과 신한울 3·4호기 완공이 지연되면서 이에 따른 추가 비용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이번 토론회는 현 정부가 과거 정부의 정책 실패로 인해 가중된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어떻게 대응해왔는지 짚어보고, 평가하여 앞으로의 위기극복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합니다. 특히 민생과 직결되는 고용과 한국경제의 기초체력인 산업·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평가와 심도 깊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토론을 통해 전문가 여러분의 고견을 모아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에 함께해주신 내외 귀빈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4일
국회의원 윤 창 현

인사말씀



조동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 조동근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토론회에 참석해 주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평가토론회는 관계 전문가의 고견을 듣고 한국경제의 진로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1년을 평가하면서 4월 27일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올해가 한·미동맹 70주년 되는 특별한 해이기에 가질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70주년에 각별한 의미를 부여한 것은 ‘연설 내용’입니다.

‘자유와 동맹’을 주제로 한·미 동맹의 과거와 현재를 조명하면서 전(全)세계 자유시민을 향해 ‘자유와 나침반’이 되겠다는 비전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 참전 미군 용사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미군사동맹을 ‘이념과 가치동맹’으로 격상시켰고, 여기에 경제 협력이라는 실리와 공감이라는 문화코드를 덧 입혔습니다.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와의 연대에 우리의 생존과 국익이 달려있음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외교·안보는 먹고사는 민생과도 직결됩니다. 공급망을 강화하고 첨단 기술 혁신을 통해 기술적 우위를 확보하지 못하면 생존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이념전쟁’ 중에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면 현실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이념과 가치전쟁을 통하지 않고 부(富)를 형성하고 유지한 역사적 사례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금리, 통화, 환율, 재정’ 등 경제변수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들이 “자유, 시장, 민주주의 그리고 국가의 역할” 등에 대해 건강한 가치관과 지식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국정철학과 방향이 빈(貧)과 부(富)의 길을 가릅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성공한 정부는 아닙니다. 그들은 시장(市場)에 대해 무지했고 ‘이념적 도그마’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2017년 5월 한국경제는 ‘경기정점’ 이었습니다. 경기하강에 대비했어야 함에도 최저임금을 인상했고 ‘부자증세’란 이름으로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렸습니다.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사회주의적 슬로건은 ‘국민의 국가에의 의존’을 타성화 시켰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파행적이었습니다. 경제활력의 저하는 불문가지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야당은 숫자에 기대어 ‘입법폭주’에 함몰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최악의 초기조건에서 출발했습니다. 초기조건은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기에, 초기조건이 바람막이가 될 수는 없습니다. 2022년 5월 10일 이후의 경제운영은 오롯이 윤석열 정부의 몫입니다. 정책토론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경제적 성과와 과제를 ‘고용위기, 산업 및 에너지 위기’로 좁혀 논의합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필요하면 다가온 회초리를 들어 윤석열 정부를 질타하겠습니다.

바른사회시민회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가치 및 지식공동체’입니다. ‘큰 틀’에서 바른사회시민회의와 생각을 같이하는 전문가를 중심으로 토론회를 꾸렸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토론회를 위해 시간을 할애해 주신, “김대호, 김이석, 박인환, 양준모, 임재규, 정범진, 조성봉, 천양하, 황인학” 님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23년 5월 4일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조 동 근

축 사



김기현

제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당대표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당 대표 국회의원 김기현입니다.

오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바쁜 의정 활동 중에도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수고해 주신 이인선 의원님, 윤창현 의원님을 비롯한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생을 최우선으로 무너진 경제를 회복하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은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탄생시켰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전 정권의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에너지 수급정책’ 등 실패한 정책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을 거듭한 바, 새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든든한 성원과 지지를 받아 성과를 창출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박 7일 국빈 방미 기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은 특유의 세일즈 외교와 리더십을 발휘하였고,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의 면모를 나타냈습니다. 순방 첫날, 다국적 OTT 기업 넷플릭스로부터 5년간 K-콘텐츠에 대한 25억 달러 투자를 이끌어내었으며, 이튿날 미국의 수소·반도체·친환경 분야 6개 첨단 기업의 19억 달러 투자 유치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국민 방미는 한미 양국이 지속 가능한 첨단기술동맹으로 발전하고, 향후 차세대 핵심·신흥기술을 공유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나타내며, 경기 침체와 고물가 기조를 풀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점에도 민주당은 사사건건 트집 잡기에만 매달리는 등 외교 성과를 깎아내리려 혈안이 된 모습입니다.

우리의 국익과 실리가 날조 및 선동으로 가려질 위험에 처한 지금,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뜨거웠던 지난 1년을 되돌아볼 오늘의 토론회에 남다른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심도 있는 성과평가와 시의적절한 토론을 통해 향후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도의 해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와 국민의힘 역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책임 있는 정책과 비전으로 윤석열 정부의 노력에 힘을 보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의미 있는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귀한 시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4일

국회의원 당대표 김 기 현

축 사



윤재옥
제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원내대표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의원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를 논하기 위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이인선 의원님과 윤창현 의원님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바쁘신 가운데도 발제와 토론을 맡아 주신 발제자 및 토론자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 대한민국의 국내외적 경제 상황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신(新) 3고(高)’의 파고가 몰아치고 있었으며,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전세 사기 등 문재인 정권의 정책 실패로 인한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으로 민생경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물가를 잡고 금융시장을 안정시키는 동시에 일자리를 늘리고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며,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 발굴에도 집중해야 하는 동시다발적 해결 과제를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강철 같은 한미간 신뢰를 다지며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대통령 방미 중 최고의 성과를 얻어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미국 순방을 마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의 면모도 유감없이 발휘하며 국민 경제와 직결되는 경제안보 협력 관계를 다진 것은 물론, 미국과의 첨단기술동맹을 심화시켜 대한민국의 새로운 먹거리 발굴에도 성공했습니다.

반도체 분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최첨단 기술과 소재 등의 교류를 보장받고, 넷플릭스 및 첨단 분야에서 총 59억 불의 투자유치를 통해 경제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IRA와 반도체과학법에 대한 미국 대통령의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와 기업 활동에 대한 특별한 지원과 배려를 약속받아 기업하기 좋은 국제적 환경을 만드는데 성공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주사업과 사이버 사업 등 상호 협력과 교류를 보장받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새롭게 성장하는 미래 블루오션을 개척하는데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민생과 경제 안정화를 위해서 갈 길은 녹록치 않습니다. 이전 정부의 잘못된 정책을 바로 잡고 노동·연금·교육의 3대 개혁, 급증하는 가계부채 해결 등 국내적으로 아직 해결되지 않은 민생과 경제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대안 마련에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역대 정부 중 가장 험난한 정치·경제·안보 상황에서 시작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 평가를 통해 향후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개최를 축하드리며,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축 사



박대출

제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정책위의장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토론회: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침몰하는 대한민국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국민께서 직접 일궈주신 윤석열 정부의 첫 1년이 숨가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의적절한 평가토론회를 준비해주신 존경하는 이인선 의원님과 윤창현 의원님, 그리고 박수영 의원님을 비롯한 여의도연구원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정책의 뿌리는 민심입니다.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 정확한 정책과 중장기적인 국가비전 마련에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양준모 공동대표님을 비롯해 운영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11일,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8%로 1월 기준 전망치보다 0.1%p 하향 조정했습니다.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그보다 큰 0.2%p 낮았습니다. 벌써 4번째 하향입니다.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경기도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최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의 기준금리 3.5% 동결은 더 이상의 경기둔화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한미 금리차가 역대 최대인 1.5%p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국내경제의 부진한 성장흐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전 정부는 70여년에 거쳐 쌓아온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을 조금씩 헐어 정치이론에 가까운 ‘소득주도성장’의 토대로 활용해왔습니다. 경제학원론에도 없는 실험적인 경제정책을 고집한 끝에 정부 부채가 지난해 GDP의 55% 수준까지 증가하였고, 이에 IMF마저 과도한 확대재정을 자제하라며 경고한 바 있습니다. 올해 들어 반도체·자동차·석유화학 등 기존 수출효자 종목의 연쇄 부진이 예상되면서 그나마 펀더멘털을 받쳐주던 경상수지 전망도 어둡습니다. 사상 최대 적자폭으로 돌아서며 11년 만에 두 달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국민과 국가경제 전체를 두고 ‘실험’을 강행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이제야 증명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정부가 남긴 상흔이 경제 펀더멘털까지 위협하며 작은 대외변수에도 쉽게 흔들리는 사태에 이른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큰 부담이지만, ‘다시 도약하는 국민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반드시 뛰어넘어야 할 허들입니다.

정부 출범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떠넘겨지듯 폭탄을 강요받은 현 정부가 과거의 실책으로 가중된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어떻게 다뤄야할지, 또 지금까지 어떤 수습을 해왔는지 살펴볼 때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적인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는 이 때, 가장 경기민감도가 높은 고용과 산업·에너지를 중심으로 위기극복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자리가 마련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이 토론회가 심도있는 성과평과와 열띤 토론으로 정부여당이 놓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보는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정책위 차원에서도 오늘 다뤄질 고용과 산업·에너지 분야의 성과평과와 후속 조치들에 대한 지혜들을 잘 담아, 방향성 재확인과 실질적인 정책전환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소중한 발걸음 해주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4일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박대출

축 사



임이자

제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국회의원 임이자입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토론회: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존경하는 이인선 의원님, 윤창현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의힘 싱크탱크로 끊임없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계신 여의도 연구원 박수영 원장님과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오늘 토론회가 깨어있는 시민단체 주관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에 의미가 남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당에 시민의 대변인이 되고 계신 바른사회시민회의 조동근, 양준모 공동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평가토론회에서도 가감없는 민심을 전달해주시고, 따끔한 국민의 평가를 대변해 주시길 기대합니다.

공정과 상식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달라는 국민의 부르심 아래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았습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위해,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남은 4년을 또 준비해야 합니다.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기대하며 지난해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국민의 겸허한 선택으로 구성된 정부였지만, 거대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끊임없는 국정방해가 이어졌고 이는 기본적인 정부조직마저 국민의 뜻을 펼치기가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이전 정부 시절은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외면했던 양곡관리

법, 연금개혁, 간호법·의료법 등을 독자 강행하고, 합의를 운운하며 국정과제 관련 법안 처리는 가로막고 있습니다. 올해 말로 종료될 일몰 법안인 30인 미만 업체 8시간 추가 연장근로제 근거법인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일명 안전운임제와 주고받자는 야당 고집에 아직도 묶여있고, 월 70만원 부모급여 도입법안은 합의부족을 운운하며 복지위 법안소위에 계류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전 정부의 고집스러웠던 소득주도 성장과 일부 태양광 사업자들 배만 불린 탈원전 에너지 수급정책이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산업구조에 중장기적인 부작용만 남겼음이 명확하게 드러났음에도, 국가에 대한 걱정보다 자당(自黨) 극렬 지지자들 등쌀 걱정이 우선하는 듯합니다. 실험에 가까웠던 이전 정부의 간판 정책들의 실패 여파만 현 정부에 떠넘기고 새롭게 시작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을 묵살하는 야당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이렇듯 현 정부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지만, 손 놓고 있을 순 없습니다. 지난 1년간 우리는 대한민국 경제위기를 어떻게 다루어왔는지, 또 앞으로 어떻게 다루어 가야할 지를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경기민감도가 높은 고용분야와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 회복 기반이 될 산업·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신랄한 성과평가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니, 더욱 기대가 됩니다. 출범 1주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작업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디지털 경제 등 산업환경의 변화, 저출생·고령사회의 도래로 인한 인구사회구조적 변화가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이 마주한 마지막 골든타입입니다. 특히 노동개혁은 공정한 사회를 만들고 상식적인 고용과 노동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꼭 해야만 하는 시대적 과제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평가토론회를 통해 남는 4년여의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지지 속에 유연하고 공정한 노동환경을 위한 개혁작업에 성공하는 논의의 기반이 다져지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내외빈 여러분 가정과 건강에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4일

국민의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임 이 자

축 사



한무경

제21대 국민의힘 국회의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를 맡고있는 국민의힘 한무경 국회의원입니다.

우선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애써주신 이인선, 윤창현 의원님과 여의도연구원, 바른사회시민회의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다 되어갑니다.

지난 문재인 정부 5년의 정책실패 여파가 현 정부에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는 와중에 대내외 불확실한 경제상황까지 지속되면서 윤석열 정부가 마주한 현실은 녹록치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한 윤석열 정부의 노력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가·환율·수출 등 ‘악조건’ 상황에서도 세계 정상화, 국가전략기술 지원,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등을 통해 부동산 안정과 고용률 상승 등 경제 성장추세에 근접하는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난 4월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민방문을 통해 비즈니스·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첨단산업 포럼 등 경제계 협력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첨단 분야에 34억 달러(약 4조 5천억 원)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1년의 성과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의미있는 정책 방안이 도출되길 기대합니다.

과거의 잘못된 정책과 그 부작용을 바로 잡는 일이란 매우 어려운 길입니다. 나라를 바르게 일으키는 걸음걸음마다 늘 함께하고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저도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성공에 모든 역량을 쏟겠습니다.

다시 한 번 토론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 무 경

축 사



김문수
전 국회의원
경제사회노동위원장

조동근교수님과 양준모교수님, 박인환교수님께서 공동대표를 맡고 계시는 바른사회시민회의가 주관하고,

이인선 대구수성구를 국회의원님, 윤창현 국회의원님과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님께서 함께 주최하시는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개최를 축하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권교체 후 지난 1년 동안 법치주의 노동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987년 노동자대투쟁과 민주화 이후 지난 35년간 노동현장에서는 공권력이 무너졌습니다.

노동개혁의 방법에는 노사정 합의방식과 국회의 입법개혁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은 지난 22년간 사회적 대화에 불참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 위원장도 대통령선거 이후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국민의힘이 115석으로 과반에 한참 모자라기 때문에 입법개혁이 어렵습니다.

윤석열대통령은 아무리 어려운 여건이라 하더라도 법치주의를 반드시 확립해야 한다는 소신으로 화물연대 운송거부와 건설노조 불법행위에 단호하게 대처해왔습니다.

노동조합회계 투명성 제고와 불법행위 척결을 현행법 테두리내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300만 노동조합 조직은 노동개혁에 저항하고 있습니다.
방송언론환경도 좋지 않습니다.

지능정보혁명시대에 더욱 극심해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극복하려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야 합니다.

가장 바람직한 노동개혁은 노사정의 대화와 합의에 의한 노동개혁입니다.

노사가 협력할 때, 투자는 늘어나고 일자리가 창출되며 노동 복지는 향상될 것입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대통령 자문 역할과 사회적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동안 법치주의 노동개혁은 상당한 성과를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국회를 통한 입법개혁과 노사정 합의를 통한 개혁에도 진전이 있도록 양준모 대표님과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장님, 천양하 교수님, 김이석 소장님 좋은 발제와 열띤 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5월 4일

경제사회노동위원장 김 문 수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세션 1

I. 고용 위기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발제

고용위기, 원인과 대책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

1. 안도의 한숨과 다시 하는 회의와 우려

문재인정부 5년은 외교·안보·북한 정책과 경제·고용·노동 정책을 논하기가 참 쉬웠다. 문정부의 철학(역사·현실 인식)과 주요 정책은 국가경영의 기본 상식 내지 문명국의 표준(글로벌스탠다드)에서 너무나 벗어났기 때문이다. 지금도 마차(고용)를 움직여 말(경제)을 움직인다는 발상, 즉 결과(좋은 일자리 창출)와 원인(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을 뒤바꾼 도식이 고용노동부 대통령 업무보고(소득주도성장, 2018.1.18)¹⁾ 등에서 거론되던 기억을 악몽처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그런데 더 참담한 것은 이 희대의 경제·고용 파괴범인 문재인이 여전히 무시못할 지지율을 가지고 있고, 이를 뒷배로 "5년간 이룬 성취가 순식간에 무너졌다"²⁾는 등의 발언을 하면서, 과거를 정당화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윤석열정부는 정부 출범(2022.5.10.) 한 달여 뒤(2022.6.16.)와 연말(2022.12.21.)에 각각 관계부처 합동으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58쪽)과 <2023년 경제정책방향>(64쪽)을 발표했다. 내용은 엇비슷하다. 문정부를 제외한 모든 정부들이 견지해 온 경제정책의 기본과 원칙에 비교적 충실하다. 대한민국의 정통·주류·엘리트 경제관료들과 경제학자들의 경험, 지식, 통찰이 녹아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바로 이 때문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된다. 동시에 슬하게 봐오던 이런 상투적 진단과 대안으로, 문정부가 급격히 악화시킨 만성질환 내지 한국병(경제·고용위기와 초저출산 등)을 치유할 수 있을지 회의(懷疑)하게 된다. 설상가상으로 문정부 세력은 여전히 국회, 노조, 방송사 등을 장악하여 윤정부의 손과 발을 묶고,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 하니!

<p>새정부 경제정책방향</p> <p>2022. 6. 16.</p> <p>관계부처 합동</p>	<p>2023년 경제정책방향</p> <p>2022. 12. 21</p> <p>관계부처 합동</p>
---	---

1) 2018년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5쪽(<https://www.moel.go.kr/policy/busireport/busireportList.do>)

2) 5월 개봉예정 다큐영화 '문재인입니다' 관련 발언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65458>

<새정부 경제정책방향>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기초는 거의 같다. 자유·혁신·공정·연대가 핵심 가치고, “민간중심” “미래대비” “체질개선” “민생경제” “함께가는” 경제 등이 주요 기동으로 자리 잡았다. 다만 ‘6.16 방향’은 노무현정부 시절부터 경제관료들과 학자들이 주장한 지론(일반론)에 입각하여 경제정책의 목표를 “저성장 극복과 성장-복지 선순환”으로 잡았다면, ‘12.21 방향’은 심상찮은 경제·민생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목표를 “위기극복+경제 재도약”으로 잡았다.



‘6.16 방향’에서도 당면현안대응에 민생안정(물가안정 및 서민생활부담 완화, 주거안정)과 리스크관리(경제안보 대응, 위기관리 강화)가 자리하고 있었는데, ‘12.21 방향’에서는 이를 목표(위기극복)에 담았다. 그에 따라 ‘12.21 방향’에서는 거시경제 안정관리(금융시장 안정, 잠재리스크 대응, 부동산시장연착륙, 에너지 위기 대응 등)가 4대 정책 방향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윤정부의 1년은 문정부가 떠 남기고 간 온갖 폭탄, 예컨대 공공요금 인상 떠넘기기에 따른 한전 등 에너지 공기업의 천문학적 적자, 더 방만하고 비대해지고 수익성은 악화된 공공기관, 폭증한 국가채무, OECD 최고 수준의 가계부채(2021년 기준, 전세보증금 포함 156.8%(2,925.3조원))와 부동산 경기 위축, 미국 연준

의 급격한 금리인상 등 동시다발 경제 악재 대응에 급급했다. 그런 점에서 윤정부 1년 평가는 돌발적인 경제위기 대응과 경제 재도약을 위한 발판 마련(만성질환=한국병 치유) 여부가 중심 일 수밖에 없다.

2.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과 <2023년 경제정책방향>의 노동개혁 좌절의 교훈

<새정부 경제정책방향(6.16)>은 “現 우리 경제 상황”을 “1.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 문제 누적”(만성질환)과 “2. 최근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대외 불확실성 확대”(최근 등장한 경제악재)로 요약하였다. “1. 근본적 문제”로 “1)산업·기업 역동성의 지속 둔화로 인한 민간활력 약화, 2)경제·사회 체질개선 지연, 3)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투입 위축”을 들었다. “1)산업·기업 역동성 둔화”의 이유로는 “산업구조 전환의 지체, 과도한 규제·정부개입” “민간의 성장·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 대응”에 따른 “단기·재정·고령 일자리 중심 증가” 등을 들었다. “2)경제·사회 체질개선 지연” 이유로는 “(공공)재정 중심 경제운용, 코로나 대응 등으로 국가채무 급증, 연금개혁 지연”과 “(노동)획일적 규제, 경직적 노사관계, 연공 중심 임금체계” 등을 들었다. 그 예로 2018년 기준 근속연수 30년 이상자 임금이 1년 미만자의 몇 배인지를 따져보니, 한국은 2.95배(2020년), 독일은 1.80배, 프랑스는 1.63이라는 통계를 들었다.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16)의 경제상황 진단

<h4>I. 現 우리 경제 상황</h4> <p>◇ 우리 경제 성장 기반은 '90년대 이후 주요국 대비 급속히 하락 * 경제성장률(%) : '90년대 7.1 → ('00년대) 4.7 → ('11~'15) 3.1 → ('16~'21) 2.4</p> <p>◇ 이러한 가운데, 최근 물가 상승세가 확대되고 성장세도 약화</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주요국 잠재성장률 추이(OECD)</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주요국 물가 상승률 추이(OECD)</p> </div> </div> <p>⇒ 구조적 문제가 누적되고, 당면한 민생 어려움이 겹쳐 위기상황에 직면</p>	<h4>② 경제·사회 체질개선이 지연되면서 생산성·성장잠재력 하락</h4> <p>○ (공공) 재정 중심 경제운용, 코로나 대응 등으로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어나고, 연금개혁도 지연되며 지속가능성 우려 확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의 경우 인력이 급증하였으나, 수익성과 부채 악화 공기업 이자보상배율(%) : ('16) 3.7 ('17) 2.7 ('18) 1.5 ('19) 1.3 ('20) 1.4 ('21) 0.1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국가채무 규모 및 GDP 대비 비율</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공공기관 인원 및 부채규모</p> </div> </div> <p>* 출처 : 기획재정부 (22년 2차 추정 기준) * 출처 : 알리오</p>
<h4>1.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 문제 누적</h4> <h4>II 산업·기업 역동성이 지속 둔화되며 민간활력이 크게 약화</h4> <p>○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최근 과도한 규제·정부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면서 민간투자가 빠르게 위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1년 OECD 38개국 중 상품시장규제 강도 6위, 정부 기업활동 개입 수준 3위 기업들의 급속한 해외투자 확대 등으로 민간 일자리 창출력도 둔화 제조업 취업유발계수(명/10억원) : ('00) 11.2 → ('10) 9.8 → ('15) 8.7 → ('19) 7.6 <p>○ 민간의 성장·고용 둔화에 재정 중심으로 대응하면서 민간활력은 더욱 저하되고 일자리는 단기·재정·고령 일자리 중심으로 증가</p>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제조업 국내·해외투자</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민간 성장기여·단기 일자리</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재정·고령일자리</p> </div> </div> <p>* 출처 : 수출입은행, 산업은행 * 출처 : 한국은행, 통계청 * 출처 : 기획재정부</p>	<p>○ (노동) 획일적 규제, 경직적 노사관계, 연공 중심 임금체계 등이 청년·여성 등 신규채용 확대 및 노동생산성 향상을 제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속연수 30년 이상/1년 미만 임금(배, '18년) : (韓) <20년> 2.95 (獨) 1.80 (佛) 1.63 노동시장 경쟁력(IMD, '22년) : 63개국 중 노동시장 경쟁력 42위, 노동생산성 51위 <p>○ (교육) 높은 대학 진학률에도 불구하고, 대학 자율성 제약 등으로 교육경쟁력이 낮고 산업현장 수요와 교육간 미스매치 심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경쟁력(IMD, '22년) : 63개국 중 교육경쟁력 29위, 대학교육 경쟁력은 46위 5대 유망신산업 인력수요 : '20년 24만명 → '30년 38만명까지 증가 예상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style="text-align: center;"> <p>주요국 시간당 노동생산성('19년)</p> </div> <div style="text-align: center;"> <p>5대 유망 신산업분야 기술인력 부족률('20년)</p> </div> </div> <p>* 출처 : OECD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p> <p>○ (금융·서비스산업) 산업구조 전환을 뒷받침하는 금융·서비스산업 혁신이 지체되며 총요소생산성 지속 하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제조업 대비 서비스업 생산성(%) : (韓) 49.6 (美) 83.0 (OECD평균) 80.2 총요소생산성 성장기여율(% , '01~'17) : (韓) 19.4 (美) 34.5 (英) 35.3 (獨) 59.4

또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은 체질개선 방향으로 5대 부문 구조개혁을 제시했는데, 그 중 노동시장개혁방향으로 “획일적 노동규제·관행을 노사자율·선택 방식으로 전환” 하기위해 “④노동시장 환경변화에 맞게 근로시간제도 합리적개편 ⑤직무·성과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제시했다.

2 체질개선 도약경제 <small>“5대 부문 구조개혁으로 한국경제 성장경로 업그레이드”</small>	[2] 노동시장 개혁
11 5대 부문 구조개혁 추진방향	◇ 급변하는 노동환경에 탄력 대응할 수 있도록 경제적 근로시간, 임금체계 개편을 중점 추진 · '22.6월중 구체적 추진방향 확정·발표
공공·연금개혁 비대해진 공공부문 효율화 및 지속가능성 제고 ①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재정혁신 ② 양질의 공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고강도 공공기관 혁신 ③ 적정 노후소득보장연금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	11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도록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
노동시장 개혁 획일적 노동규제관행을 노사 자율선택 방식으로 전환 ④ 노동시장 환경 변화에 맞게 근로시간 제도 합리적 개편 ⑤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	○ (제도개선) 실근로시간은 꾸준히 단축하면서 현장의 어려움 해소 및 시대변화의 흐름에 맞게 조정 · 주 52시간제 기본 틀 속에서 운영방법과 이행수단 개선 · 노사합의를 기반으로 근로시간 운용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근로자의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건강보호조치 병행 ·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및 연장근로시간 총량 관리단위 확대 등 ·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 유연근로제 활성화 추진 · 스타트업·전문직의 근로시간 운영 예외사항 해소 · 실태조사·현장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수렴 등을 거쳐 근로시간 제도 개선안 마련('22.1) 후, 법 개정안 국회 제출 ○ (보완방안) 제도개편 전까지 규모별·업종별 컨설팅·설명회 등 근로시간 운영 지원 및 휴일·휴가 활성화 추진
교육개혁 현장수요 맞춤 미래 혁신인재 양성 ⑥ 첨단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대학교육 혁신 및 자율성 강화 ⑦ 현장 수요에 맞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재양성 체계 구축	12 연공급 위주의 임금체계를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제로 전환·확산
금융혁신 금융산업을 민간 중심 성장의 핵심 축으로 발전 ⑧ 디지털 금융혁신 촉진 및 민간의 역동적 혁신 지원 강화 ⑨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 (정보제공 강화) 한국형 직무별 임금정보시스템을 신설하여 직무별 임금정보를 제공하고 현장수요에 맞는 임금체계 개편 가이드북 보급 · (현행) 직업 대중소분류별 임금정보(개산) 직무별 업무기술지식 요구수준 및 임금정보 제공 ○ (컨설팅 확대)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사업체 특성에 맞는 합리적 임금·평가체계 도입 지원 ※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개편 지원을 위한 세부 추진방안 마련('22.2)
서비스산업 혁신 서비스 생산성을 주요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⑩ 서비스 창출을 위해 규제 합리화 및 육성기반 마련 ⑪ 제조업-서비스업 간 지원 차별 해소	13 미래지향적 노동시장 구축을 위한 과제 발굴·논의 추진
	○ 경사노위내에 노사 등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논의체계를 마련, 과제 발굴 및 사회적 논의 추진 · 노동시장의 발전을 위해 대화를 우선하되, 노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

이는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서도 거듭 확인되었다. “근본적 체질개선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집중 추진”을 공언했는데, 노동개혁의 첫 번째 과제가 바로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추진”이었다. “근로시간”과 관련해서는 “연장근로 등 제도유연화와 건강권 보호 강화 병행, 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하여 근무유연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몇 개월 뒤 민주당과 노조가 “주69시간제” 프레임으로 좌절시킨 정부의 입법예고안(2023.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의 주요 내용을 예시했다. “1」(예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선택 가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2」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간 11시간 휴식권 부여 등”. 동시에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2022.12.22) 기반으로 경사노위 등 사회적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입법을 2023년 상반기 중에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 추진 경과 및 결과는 윤정부의 남은 4년을 위한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

4 미래대비 체질개선 “3대 구조개혁-3대 경제혁신을 가속화하고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대비 강화”

[1] 3대 구조개혁

◇ **근본적 체질개선 위해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집중 추진**

1 (노동개혁) 근로시간·임금체계 개편 구체화 및 이중구조 개선 추진

- (근로시간) 연장근로 등 **제도유연화¹⁾**와 **건강권 보호 강화²⁾** 병행, **노무비, 인프라 구축비** 등을 지원하여 **근무유연화 분위기 확산**
 - 1) (예시)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주단위에서 주·월·분기·반기·연 선택 가능 선택근로시간제 정산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등
 - 2) 연장근로 단위기간을 월 이상으로 하는 경우 근로일당 11시간 휴식권 부여 등
- ‘미래 노동시장 연구회’ 권고안 기반으로 **경사노위 등 사회적 대화를 거쳐 근로시간 개편안 마련·입법 추진**(‘23. 上)
- (임금체계) 직무별 임금정보 인프라 구축, (가칭)상생형 임금위원회 신설 등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노력 지속**
- (이중구조) 고용형태·기업규모 등에 따른 **노동시장 격차 완화, 보호 사각지대 해소** 등에 대한 ‘포괄적 개혁 논의’ 착수
 - * 경사노위 등 통해 이중구조 개선 위한 사회적 대화 → 개선안 마련 추진(‘23. 下)
 - 원·하청 **상생모델 확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下 **파견제도 개편, 다양한 고용형태를 포괄하는 노동법제 마련** 등 추진



2023.3.6 정부 입법예고안은 글로벌 스탠다드의 한 부분이자, (고용임금 유연성은 언감생심이나 근로시간 유연성이라도) 허용했으면 하는 산업계의 절박한 요구이자, 정통 경제 관료들과 학계(자유·보수·중도적 노동전문가)의 오랜 컨센서스였다. 그래서 <정책공약집>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 <노동시장 개혁추진방향> ->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안> -> <2023년 경제정책방향> -> <3.6 정부입법 예고안>으로 오는 과정에서 그 기초가 전혀 흐트러지지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현실 정치를 아는 사람들은 현재의 정치 지형과 노동계의 오랜 행태로 미루어, 입법예고안 통과는 결코 쉽지 않으리라고 예상했다. 180석에 육박하는 민주당+민주당계 무소

속+정의당+진보당의 이념 및 정략과 정면 충돌하며, 상위 10~20%에 속하는 민노총-한노총-MZ세대 노조와 포괄임금제를 적용받는 언론사 기자들의 이해관계와도 충돌하기 때문이다. 실제 3월 9일 MZ노조협의체(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근로시간 개편안 반대 논평을 내놨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 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상황에서 연장근로 확대는 시기 상조"라는 것이 요지였다.

3월 14일 윤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 지시했다. 3월 16일 오전에는 한국노총, 민주당, 정의당이 기자회견을 열어, '주69시간 노동시간 개편안'의 완전 폐기를 촉구했다. 오후에는 안상훈 사회수석이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고 적절한 캡(상한)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면서, "고용노동부가 입법 예고한 법안은 노사 합의에 따라 근로시간 선택권, 건강권,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정부는 추후 MZ세대 근로자, 노조 미가입 근로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현장의 다양한 의견에 귀 기울이면서 보완 방안을 마련해 가겠다"고 하였다. 3월 20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의견 수렴을 하면 주 60시간이 아니라 그 이상 나올 수 있다."고 했으나, 3월 21일 윤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 "주당 60시간 이상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는 생각은 변함없다."라고 하였다.

그런데 지금도 노사가 3개월 단위 탄력근로에 합의만 하면 최대 6주까지 근로시간을 주 64시간(52시간+연장근로 12시간)으로 늘릴 수 있다. 하지만 아무도 지금 제도를 64시간 근로제라 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발언은 노동정책과 노동정무를 종합적으로 고민하는 노동관련 보좌진의 부재 혹은 부실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안을 정치적으로 고려없이 밀어붙인 공무원들의 관성(매너리즘)의 소산이라고 보아야 한다.

원래 노동개혁은 연금·교육·공공·사법·언론·재정개혁과 달리, 3,000만명의 유권자=근로자가 피부로 느껴 예민하게 반응하는 지극히 정치적인 사안이다. 야당은 자신의 정체성 과시 소재로 삼고, 노조들도 자유·보수·우파 정부의 정책은 일단 반대부터 하고 본다. 노조(민노총)에 장악된 방송·언론도 이념(반보수·우파)과 이익(개혁은 노조기득권 침해)의 양 측면에서 노동개혁의 진실을 알리고, 균형잡힌 보도를 할 이유가 별로 없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이득인 노동개혁은 경제 관료나 경제 학자들이 백안시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정무적 고려가 필요하다. 경제·고용·노동 관련 법·제도·정책 전반과 노동정무(정치지형, 내러티브, 프레임, 언론과 노조의 동역학 등)에 밝은 자문·보좌그룹의 도움을 받아, 대통령 주재 노동개혁 전략전술 회의를 통해 단기(총선 전) 및 중장기(총선 이후) 노동개혁 목표를 수립하고, 국회 지형(법 통과 가능성)과 정치적 득실(여론과 언론 등)을 종합하여 노동개혁 로드맵(전략전술)을 만들어야 한다는 얘기다. 실은 연금·교육·공공·사법·언론·세금·정치 등 모든 개혁이 그래야 한다. 3.6정부입법안을 둘러싼 정부여당의 우왕좌왕과 입법의 좌절은 미국 케네디 정부가 '피그만 침공' 작전에서 보여준 '집단 사고'(group thinking)의 오류 사례 중의 하나로 올려야 할지 모른다. 요컨대 모든 개혁은 정책적 고려와 정무적 고려를 종합적으로 하는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군으로 치면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예비군 등을 총괄 지휘하는 합동참모본부 같은 것이 필요하다.

3. 화물노조 집단행동 대응 성공의 교훈

2022년 6월에 발표한 120대 국정과제에서 노동개혁 관련 사항은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라는 약속 아래 7개 국정과제로 정리되었다. “산업재해 예방 강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노사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일자리 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고용안전망 강화” “중소기업·자영업자 맞춤형 직업훈련 강화” 등. 이 중에는 노조의 반발을 살만한 과제는 거의 없다. 정책공약을 만든 팀과 인수위 백서를 만든 팀은 전혀 다른 팀으로 보일 정도로 단절이 심하다. 정책공약은 정치와 노조를 잘 모르면서 노동개혁의 글로벌 스탠다드에 충실한 학자들이 만들었다면, 국정과제는 정치와 노조를 잘 아는 노동정무에 밝은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만든 것처럼 보인다.

아무튼 2022년 8월 17일, 출범 100일기념 10대 지적 브리핑에서는 연금·교육개혁에 대한 얘기는 없었지만 노동개혁 얘기는 있었다. 요지는 “법과 원칙에 입각한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관행처럼 반복되고 있는 산업현장의 불법행위 근절”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면책이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개혁의 목적지의 하나인 “노동시장의 양극화와 이중구조 해결”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이해관계자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 가겠다”고 두리몽실하게 넘어갔다. 이렇듯 120대 국정과제에는 노조와 민주당이 ‘쉬운 해고’라면서 격렬하게 반발할까 두려워서인지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의 관건인 고용임금의 “유연성과 공정성”과 ‘노사 무기의 대등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다.

윤정부는 노동개혁을 지극히 조심스럽게 추진해왔다. 그런데 작년 12월 초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를 법과 원칙에 입각한 단호한 대응으로 분쇄한 후 자신감이 붙었는지, 국정과제나 정책공약집에서 전혀 언급하지 않았던 건설노조 폭력과 노조회계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거론했다. 촛불혁명(?)의 주력 부대요, 진보의 핵무력 같은 존재인 민노총과 싸움의 선두에 윤대통령이 서면서, 지지율은 유의미하게 올랐다. 하지만 노동개혁에서 노조회계문제는 지엽적인 부조리다. 그나마 회계 부정문제는 주로 한국노총의 문제다. 노조회계 자료 제출을 거부하여 얻어맞는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는 노조에게는 거의 껌값이다. 사실 노동개혁을 막아서는 선봉에는 민노총이 있지만, 그 뒤에는 공공부문이 있고, 또 그 뒤에는 노동자 전체를 약자, 피해자, 피착취자로 간주하는 1987년 체제의 핵심 통념(컨센서스) 내지 도그마가 있다. 그러므로 노동개혁은 1987년 이후 사회적 통념 내지 상식의 반열에 오른 통념 내지 이념과의 전쟁을 피해갈 수 없다. 1996년 노동법 파동(국회 과반 의석을 가진 김영삼 정부가 노조와 김대중·김종필연합에 무릎을 꿇은 대사건)이후, 고용임금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동관계법은 헌법, 선거법 만큼이나 바꾸기 어려운 법으로 인식되어 왔다. 아직도 이런 지형은 바뀌지 않았다. 그러므로 윤정부가 2,200만 근로자 전체와 300만명의 노조원 전체를 적으로 삼는다는 느낌을 줘서는 안된다. 불공정과 물염치와 일자리 말살의 주범인 일부 귀족 노조의 불법은 불용이지만, 플랫폼 노동 등 취약근로자의 자유와 권리는 전향적으로 보호한다는 느낌을 주는 메시지와 행보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한다. 3.6 정부입법안을 포함하여 역대 정부의 노동개혁 시도와 좌절은 타산지석의 교훈의 보고(寶庫)로 삼아야 한다. 연초에 정부업무 보고 과정에서 윤대통령은 (노동개혁은) “사업주, 자본가, 돈 있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것”이며, “노동은 노동을 필요로 하는 수요 기반에 유연하게 맞춰 줘야되고, 노사 간, 노노 간 (비슷한) 노동에 대해서는 비슷한 정도의 보상체계(공정성)가 있어야”한다는 것, 그리고 “유연성, 공정성, 노사법치주의와 (산업현장에서의) 안전 문제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잘못된 것을 상식적으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한 것은 노동개혁이 반노동, 반노조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일 것이다.

4. 고용위기는 이제 시작

<2023년 경제정책방향>은 정부출범 이후 약 7개월 간의 평가를 담고 있다. 한마디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에 선제적 적극적 대응 등으로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I. 그간 정책대응 및 평가

□ 당면한 복합위기 대응과 민간 중심 경제운용 기조 전환 추진

-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복합 경제위기에 선제적·적극적 대응**
 - * 전세계적으로 40년만의 고물가 직면 → 주요국 가파른 금리인상 → 달러가치 상승
 - 비상경제대응체계 가동, 수차례 걸쳐 **민생·물가안정 대책*** 추진
 - * 유류세·할당관세 인하, 농축수산물 수급관리, 부동산시장 정상화, 임대차 시장 안정 등
 -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등 **대내외 리스크 관리 강화**
 - * 시장 안정을 위한 「50조원+α」 유동성 지원, 외환수급 안정화 조치, 안심전환대출 등
- ⇒ 어려운 여건 속에서 **주요국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물가, 높은 성장률 기록**

주요국 물가 상승률 추이

기간	미국	유로존	OECD	한국
21.1	~1.0	~1.0	~1.0	~1.0
7	~4.0	~3.0	~3.0	~2.0
22.1	~8.0	~7.0	~5.0	~4.0
7	10.7	10.1	7.1	5.0

* 출처 : 각국 통계청

주요국 성장률 비교('22.1/4~3/4 기준)

국가	성장률 (%)
한국	3.0
미국	2.4
독일	2.2
일본	1.4
중국	3.0

* 출처 : 블룸버그

-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통해 **경제운용을 민간·시장 중심 전환**
 - * ①민간중심 역동경제, ②체질개선 도약경제, ③미래대비 선도경제, ④함께가는 행복경제
 - 규제혁신, 세부담 완화, 수출·투자지원 등으로 **민간활력 제고**
 - 건전재정 기조 확립 및 구조개혁 등 **경제체질 개선**
 - 신산업·신기술 육성, 인구·기후위기 대응 등 **선제적 미래대비**
 - **사회안전망 보장, 근로유인·기회 확대 등 취약계층 지원 강화**
- ⇒ 우리 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 조성**

⇒ 복합 경제위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민생·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한 구조개혁·체질개선 가속화 필요**

“Ⅲ. 2023년 경제전망”에서 “고용” 분야는 “금년(2022년)의 높은 기저영향 등으로 취업자 증가 폭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고 본다. 2022년 취업자수 증가 81만명은 장기추세를 큰 폭으로 상회했기에, 2023년에는 장기추세로 복귀할 것이라는 얘기다. 2023년 취업자수 증가 전망은 10만명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2023~2024년은 고용 위기만 위기가 아니라는 사실이다.

<2023년 경제정책 방향>의 고용 분야 전망

□ [고용] 금년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영향 등이 향후 증가세 제약

- 금년 고용은 **일상회복, 비대면·디지털 전환 수요** 등으로 **장기 추세를 큰 폭 상회하는 높은 증가세** 기록
 - * 취업자증감(만명) : ('20)△22 ('21)37 ('22.1~11) 84 <00년 이후 최고치>
- 향후 **장기 추세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기저영향, 경기둔화, 인구충격** 등이 중첩되며 **취업자 증가폭 축소** 전망

취업자수(SA) 추이

* 출처 : 통계청

고용률·실업률 추이

* 출처 : 통계청('22년은 1~11월 평균)

정부의 2023년 고용정책은 [2 민생경제회복지원]의 고용위기 대응을 위한 ‘고용안정’ 정책과 [4 미래대비 체질개선]의 ‘노동개혁’ 정책으로 대별된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2 민생경제 회복지원 “물가·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하여 민생경제 회복 지원”

[4] 고용 안정

◇ **맞춤형 일자리 및 재정지원 등으로 고용여건 악화 대응**

① **연령·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 및 중장기 고용전략 마련**

- (청년) 일경험 확대,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기업부담 경감 등으로 **17만+a명 지원**
 - ▶ (기업부담 경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확대(1년간 960만원→2년간 1,200만원, **9만명**)
 - ▶ (일경험) 기업탐방프로젝트, 인턴십 등 다양화(**2만명**), 공공기관 체험형 인턴(**2.1만명**)
 - ▶ (대학재학생) (저학년)진로탐색, (고학년)훈련일경험을 제공하는 고용서비스 시범도입(**3만명**)
 - ▶ (구직단념청년) 지원 프로그램 고도화 및 청년도전준비금(최대 300만원) 신설(**5천명**)
- 세법상 청년 연령범위 상한 확대·통일(29→34세) 및 중소기업 청년 정규직 고용세액공제 한도 상향(1인당 1,200→1,550만원)
- (고령층) 한국형 계속고용모델을 논의하는 가운데 **고령층 경제 활동참여 제고, 기업의 고령자 채용부담 완화** 병행 검토
 - ▶ (사회적 논의) 임금직무조정 근거 마련 65세 이상 신규취업자 실업급여 적용방안 등 검토
 - ※ 해외사례, 고보 재정상황, 타 사회보장제도와 정합성, 별도 시스템 적용여부 등 종합 검토
 - ▶ (장려금)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확대
 - * 계속고용장려금 : <'22년> 108억(3천명) → <'23년> 268억(8.2천명)
 - 고령자고용지원금 : <'22년> 54억(6천명) → <'23년> 558억(5.3만명)

※ 고령자 고용촉진 기본계획 수립('23.1)

그런데 앞에서 보았듯이 노동개혁의 일반 타자인 근로시간개편(2023.3.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정책은 "69시간제" 프레임이라는 일종의 변화구를 쳐내지 못하여 삼진아웃된 꼴이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출범 직후부터 최저임금과 공공부문 규모 폭증, 노동·공공·연금·교육·세제·보건의료개혁 기피 등 경제체질을 악화시키는 일을 술하게 저질렀다. 게다가 2020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내수·대면 산업을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정치방역질을 일삼았다. 코로나 충격 완화를 명분으로 현금 살포를 수차례 했지만 다른 선진국에 비해 피해 업종(대상)을 정조준한 보상에는 인색했기에 코로나로 인한 총 적자 재정(지출) 규모는 작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률이 상대적으로 좋았던 것은 바로 한국 경제성장의 기관차인 수출이 호조였기 때문이다. 이것이 외환위기 이후 경향적으로 악화된 경제체질 + 문재인정부에서 급격히 악화된 경제체질 + 코로나 팬데믹 악재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악재까지를 어느 정도는 상쇄·완충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이다. 그 결과 2020년 취업자 감소도 비교적 적었고, 2020년 2,690.4만명까지 떨어졌던 취업자는 2021년 2,727.3만명, 2022년 2,808.9만명으로 회복되었다.



2017년과 2018년(2018년과 2019년 적용) 연속 최저임금을 대폭 끌어올린 충격은 자영업자 쪽으로 집중되었다. 고용원있는 자영업자가 2018년 1,651천명에서 2021년 1,307천명으로 주는 동안,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는 2018년 3,987천명에서 2021년 4,206천명으로 늘었다. 2022년은 그 전(2021년)에 비해 취업자가 81만 6천명이 늘었는데, 고용 사정이 최근 5년 내 가장 좋은 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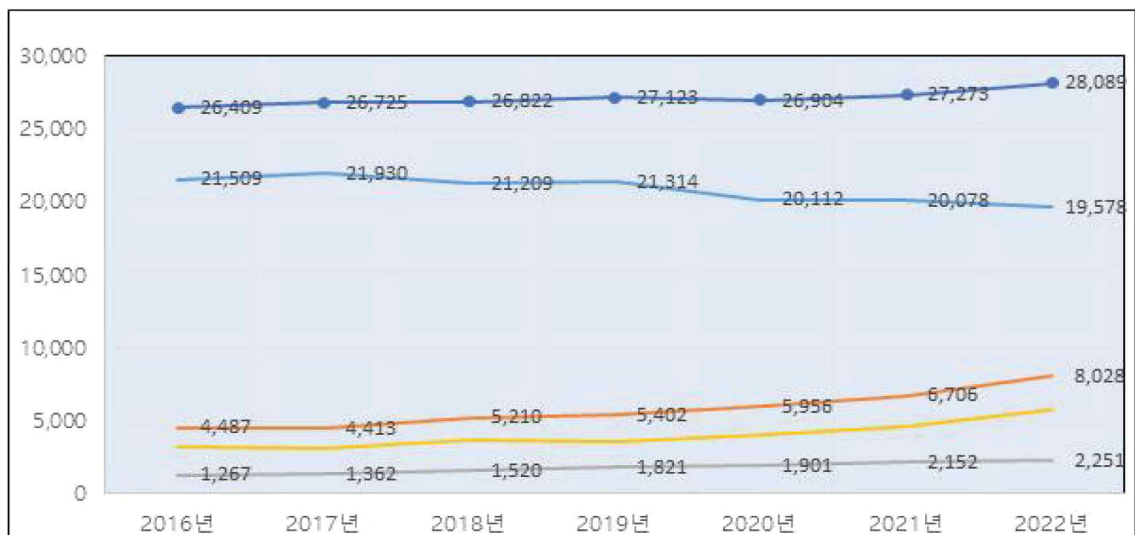
<취업자 현황>(단위: 천명)

종사상지위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2/16
취업자 총계	25,299	25,897	26,178	26,409	26,725	26,822	27,123	26,904	27,273	28,089	106%
비임금근로자	6,934	6,939	6,776	6,740	6,791	6,739	6,683	6,573	6,520	6,588	98%
<자영업자>	5,703	5,720	5,622	5,614	5,682	5,638	5,606	5,531	5,513	5,632	100%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1,533	1,581	1,609	1,584	1,608	1,651	1,538	1,372	1,307	1,365	86%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4,169	4,139	4,013	4,030	4,074	3,987	4,068	4,159	4,206	4,267	106%
-무급가족종사자	1,232	1,219	1,153	1,126	1,110	1,101	1,077	1,042	1,007	955	85%
임금근로자	18,365	18,959	19,402	19,669	19,934	20,084	20,440	20,332	20,753	21,502	109%
-상용근로자	11,847	12,319	12,716	13,062	13,428	13,772	14,216	14,521	14,887	15,692	120%
-임시근로자	4,919	5,069	5,114	5,124	4,992	4,851	4,795	4,483	4,634	4,678	91%
-일용근로자	1,600	1,570	1,572	1,483	1,514	1,460	1,429	1,328	1,231	1,132	76%

하지만 고용의 질은 경향적으로 안좋아지는 조짐이 뚜렷하다. 2016년과 2022년을 비교하면 전체 취업자는 6%늘었는데, 36시간 미만 취업자는 4,487천명에서 8,028천명으로 79% 늘었고, 36시간 이상 취업자는 21,509천명에서 19,578천명으로 9%가량 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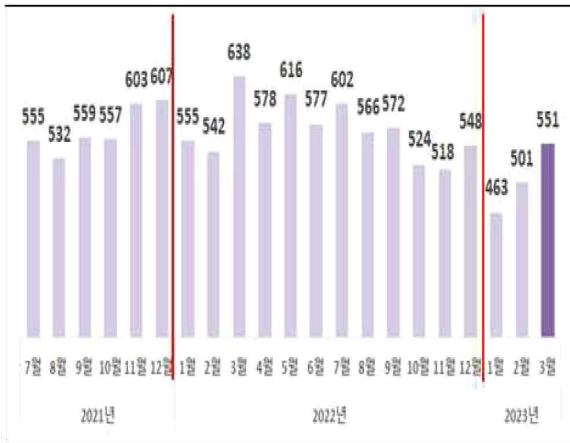
<취업시간별 취업자수>(단위: 천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2/2016
전체 취업자	26,409	26,725	26,822	27,123	26,904	27,273	28,089	106%
*36시간미만	4,487	4,413	5,210	5,402	5,956	6,706	8,028	179%
1-17시간	1,267	1,362	1,520	1,821	1,901	2,152	2,251	178%
18-35시간	3,220	3,051	3,690	3,581	4,055	4,553	5,777	179%
*36시간 이상	21,509	21,930	21,209	21,314	20,112	20,078	19,578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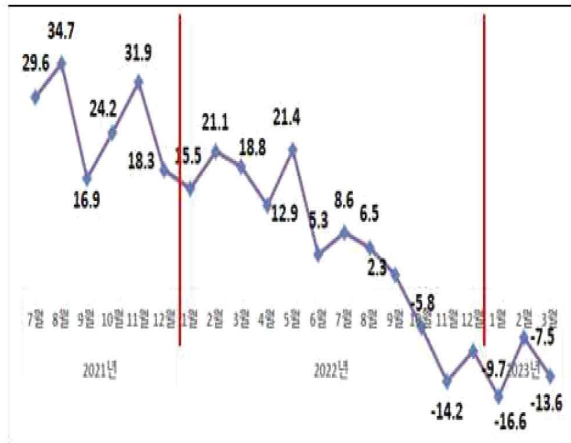


그런데 한국 경제성장의 기관차 역할을 하던 수출 증가율이 2022년 여름이후 경향적으로 떨어지다가 11월부터 그 전년 동월 대비 계속 마이너스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여파(2022.3월 0.25% → 5월 0.75% → 7월 2.25% → 9월 3.00% → 11월 3.75% → 12월 4.25% → 2월 4.75%)로 알려져 있지만, 외환위기 이후 줄기차게 거론된 경제체질 약화와 (중국의 산업굴기에 따른) 한국 주력산업의 수명 주기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

【 월별 수출액 추이(억 달러) 】



【 월별 수출증감률 추이(%) 】



【 '22년 원유·가스·석탄 등 에너지원의 전년동기비 가격상승 동향 】

유가 (두바이유, \$/bbl)		LNG 가격 (JKM, \$/Mmbtu)		석탄 가격 (호주탄, \$/톤)	
'21년	'22년	'21년	'22년	'21년	'22.1.1~12.25
69.41	⇒ 96.41 (+39%)	15.04	⇒ 34.24 (+128%)	138.33	⇒ 361.18 (+161%)

그 외에도 화석에너지 가격 급등을 한전과 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이 받아 안았는데, 이 제는 요금 인상 없이 천문학적 적자를 더 이상 감당하기 힘든 지경이 되었다.

5. 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규명·폭로되지 않은 경제·고용 적폐

문재인 정부가 거칠게 내지른 경제체질을 급격히 악화시키는 정책은 단지 문정부와 민주당을 공격하고, 지금의 경제·민생위기를 문정부 탓으로 돌리기 위한 정략이 아니다. 기본적으로 대한민국이 서 있는 지형(딛고 선 현실)과 사방에서 몰려오는 위기의 쓰나미의 실체를 국민과 함께 공유하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이 노동개혁을 포함한 모든 개혁의 기초이다. 그런데 대통령실, 정부, 여당을 주도하는 관료 출신들은, 국민에게는 큰 악덕이나 관료 특유의 미덕, 즉 부정비리가 아닌 한 권력의 지시를 이행한 전임자의 잘못은 가능한 들추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문정부의 경제고용 적폐에 대해서는 함구하다시피 하니, 문정부가 저지른 적폐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 당연히 문정부가 남긴, 아니 싸지르고 간 문제들은 좀 더 간명하게, 자주 이슈화 되어야 한다. 그 선두에 소득주도성장론=더불어 성장론과 악성 포퓰리즘이 합작한 공공부문 규모 확대가 있다. 문정부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더불어 성장의 핵심과제는 ‘좋은 일자리가 마련된 대한민국’으로, 일자리 창출로 가계소득을 늘리고, 늘어난 소득으로 소비를 확대하여 내수 활성화 및 성장으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 구조’ 구축” 한다면서, “일자리 문제 해결의 핵심은 일자리를 늘리고, 노동시간과 비정규직을 줄이며, 고용의 질을 높이는 ‘늘리고, 줄이고, 높이는’ 전략. 이를 위해 정부가 81만 개의 공공부문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앞장” 설 것을 공언했다. 그 결과 2016년과 2021년의 일자리 개수를 비교하면, 중앙정부에서 11만 9천개, 지방정부에서 27만 5천개, 공기업에서 5만 8천개가 늘어나, 공공부문 전체적으로 47만 4천개가 늘어났다. 총 취업자대비 공공부문 고용비중은 10.3%에 이르렀다. 이 시기에 OECD주요국 중에서 공공부문 고용비중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

<공공부문 섹터별 일자리 규모>

(단위 : 만개, %)

구분	공공부문 전체 일자리개수	일반정부			공기업			
		일자리개수	중앙 정부	지방 정부*	사회보장 기금	일자리개수	비금융 공기업	금융 공기업
2016년	236.5	201.3	75.5	123.1	2.7	35.3	32.7	2.6
2021년	283.9	242.8	87.4	150.6	4.7	41.1	38.3	2.8
증감	47.4	41.5	11.9	27.5	2	5.8	5.6	0.2

* 공립학교 교직원 등 중앙 공무원이지만, 지방 교육청 관할이라 지방정부에 포함

공공부문 고용비중(Government at a Glance - 2021 edition)

국가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1년	19/16
프랑스	22.1	21.8	21.5	21.2	10.3	96.1%
독일	10.6	10.6	10.6	10.6		100.5%
이태리	13.7	13.4	13.3	13.2		96.6%
일본	5.9	5.9		
한국	7.7	7.8	7.8	8.1		106.3%
스페인	16.0	15.7	15.7	15.6		97.7%
스웨덴	29.1	28.9	28.7	28.7		98.6%
스위스	10.1	10.1	10.2	..		
영국	16.2	16.1	16.0	16.0		98.5%
미국	15.3	15.2	15.0	14.9		97.6%
OECD - 평균	18.1	17.9	17.9	17.9	98.8%	

한국은 재정(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수입과 지출 규모 기준으로 작은 정부로 알려져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다. 경제적 효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정부투자 규모는 좀체 줄지 않고 있다. 2019년 한국의 일반정부 지출은 33.9%였으나 2020년 38.1%로 올라갔고, 2021년에도 거의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2020년에 코로나 팬데믹 대응하느라 재정지출을 폭발적으로 늘렸지만 2021년에는 대부분 많이 줄였고, 2022년에는 더 줄일 것이다.

국가	일반정부 지출(GDP대비 %)			정부 투자(GDP대비 %)		
	2019	2020	2021	2019	2020	2021
프랑스	55.35	61.5	59.05	3.77	3.87	3.7
독일	44.99	50.41	51.25	2.39	2.7	2.56
일본	38.73	46.04	..	4.18	4.49	..
한국	33.9	38.1	38	5.33	5.51	5.14
스위스	32.79	37.82	35.92	3.11	3.39	3.23
영국	40.8	52.4	48.27	2.7	3.06	3.02
미국	38.45	47.31	44.94	3.39	3.63	3.31
유럽연합	46.53	52.94	51.52	3.05	3.38	3.25
OECD평균	42.15	48.57	46.35	3.57	3.9	3.64

한편 연봉으로 환산한 최저임금은 한국이 2,297만원인데, 일본은 195만엔, 미국은 15,080달러, 독일은 20,398유로다. (2017년에 16.9%를 올리면서) 2018년에 일본을 넘어섰다. 한국은 절대 금액도 문제지만, 올린 속도는 더 문제다. 2016년과 비교하면 2022년은 무려 52%가 올랐다.

국가	통화	2010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2/16
프랑스	Euro	16,089	17,599	17,763	17,982	18,255	18,473	18,655	19,237	109%
독일	Euro	..	17,280	18,072	18,072	18,732	18,528	19,139	20,398	118%
일본	Yen	1,491,880	1,672,840	1,724,840	1,777,360	1,831,960	1,874,600	1,890,720	1,950,520	117%
한국	Won	11,146,320	15,123,240	16,226,760	18,885,240	20,941,800	21,543,720	21,869,760	22,973,280	152%
영국	Pound Sterling	12,132	14,976	15,444	16,115	16,879	17,872	18,434	19,453	130%
미국	US Dollar	15,080	15,080	15,080	15,080	15,080	15,080	15,080	15,080	100%

그런데 연봉환산 최저임금에는 주휴수당은 포함되지만, 1년 지나면 발생하는 퇴직금(한달치 월급=연봉의 8.33%)과 연차휴가보상비(26일치=7% 이상)와 식대는 포함하지 않는다. 게다가 한국의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극히 어렵게 만들었기에 고용주의 부담은 임금 수준보다 훨씬 클 수밖에 없다. 2021년 기준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도 61.3%로 일본, 미국과는 비교 불가고, 독일의 51.1% 보다 높다. 이 역시 올리는 속도가 문제다. 불과 5년 사이에 50.4-->61.3%로 올랐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높은 국가는 대체로 청년 고용률이 저조하다. 최저임금 때문만이 아니다. 높은 최저임금은 높은 평등의식, 강력한 국가개입주의(국가주의), 포퓰리즘 정치 등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Median relative to wages of full-time worke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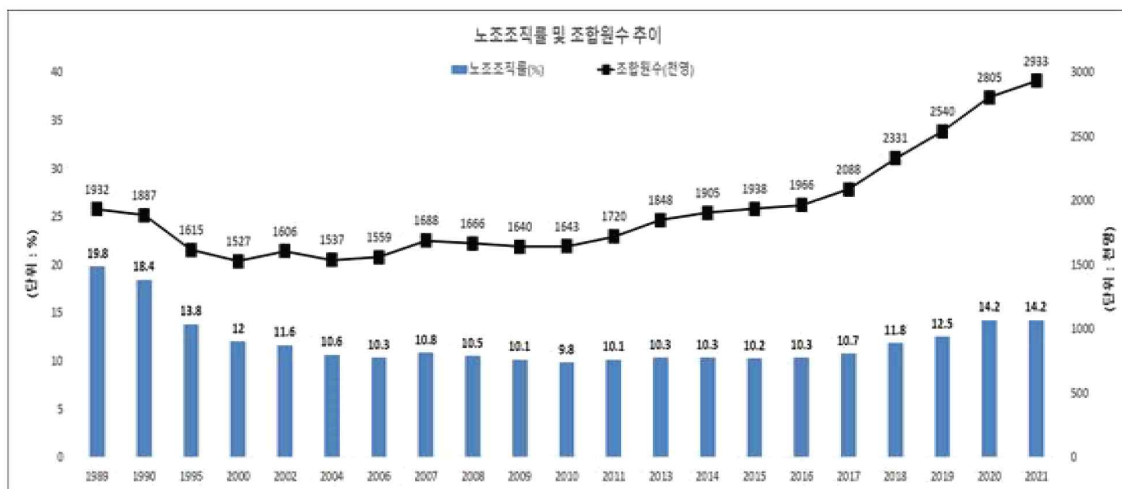
국가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1/16
프랑스	61.6	67.0	62.1	62.3	62.0	61.7	61.6	61.4	61.1	60.9	98%
독일	48.1	47.1	48.5	47.6	49.7	50.2	51.1	108%
일본	32.2	33.4	37.3	39.6	40.3	41.5	42.6	43.6	45.1	44.9	111%
한국	28.7	37.2	45.0	48.5	50.4	52.8	58.5	62.6	62.4	61.3	122%
영국	40.8	45.0	46.1	48.6	52.7	53.5	54.4	55.1	57.5	56.9	108%
미국	35.7	31.6	38.8	35.8	34.8	33.7	32.7	31.6	29.4	29.0	83%

연령계층별 고용률 : 2021년 (단위 : %)

	한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전체	66.5	67.3	75.8	58.3	77.9	75.1	69.4
15~24세	27.1	32.2	48.7	17.5	46.5	52.4	50.1
25~54세	75.3	82.1	84.5	70.2	86.0	84.4	77.6
55~64세	66.3	56.0	71.9	53.4	77.1	64.8	61.9

주 : 전체 고용률은 15~64세 기준임. 단, 스페인, 영국, 미국의 경우는 16~64세임.
 자료: OECD, <http://stats.oecd.org/>; Eurostat, <http://ec.europa.eu/eurostat/>

노조 조직률의 폭증도 문재인 정부의 빼놓을 수 없는 경제적폐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조직률은 2016년 10.3%, 2017년 10.7%, 2018년 11.8%, 2019년 12.5%, 2020년 14.2%, 2021년 14.2%로 되었다. 그런데 OECD 38개국 중에서 2017년 이후 조직률이 폭증한 국가는 한국 밖에 없다.



조직률 증가를 주도한 쪽은 공무원·교원을 포함하는 공공부문과 건설산업이다. 전자는 문정부

의 공공양반귀족=민주당 지지층 늘리기 전략의 산물이고, 후자는 건설현장에서 노조의 불법폭력을 방치한 탓이다. 조직률 보다 훨씬 심각한 것은 이념적 시대착오성과 지대추구를 능사로 알기에 노동시장에 대한 파괴적 영향이다. 단적으로 민주노총은 간첩 혐의자들이 핵심 간부(조직국장 등)를 맡고 있고, 당강령에 '4.3민중항쟁' '한미관계 해체' '중립적 통일국가' 등 북한의 대남전략을 오롯이 받아안은 진보당(이념과 인물에서 현재 판결로 해산된 통합진보당의 후신)이 지배하 증북·반미·반대한민국 세력의 외곽 대중조직이다. 한국에서 노조는 자신이 누리는 높은 권리이익을 정당화 하기 위해, 최저임금 폭등, 융통성없는 52시간제 고수, 박근혜정부의 2대 지침 폐기,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정규직=철밥통 정상=표준화 등 노동·연금·교육개혁 저지와 공공·언론방송 개혁 저지의 주력군 이다. 결과적으로 가치 생산사슬의 하단부에 속한 중소하청업체와 취약근로자의 처지를 더 열악하게 만들고, 국내 투자와 고용을 막아 청년과 미래세대의 기회와 희망을 말살한다. 대체로 조합원(중업원)의 권리·이익 유지·상향만 능사로 아는 특수이익집단=이권카르텔으로, 하는 일(직무나 생산성)에 비해 월등한 권리이익을 추구하는 현대판 양반·귀족·지대추구 집단이다. 이외에도 분노의 사실들이 한 둘이 아닐 것이다. 하지만 그 양상과 책임이 제대로 폭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조만간 모든 것이 윤석열 정부의 책임으로 될 것이다. 윤정부 1년의 핵심 맹점은 정책이 아니라 정무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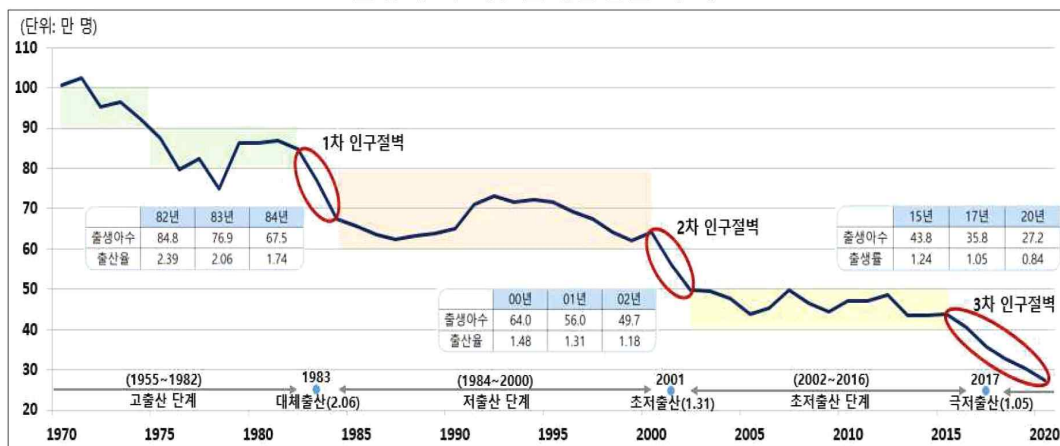
6. 여전히 취약한 문제의 근본과 구조에 대한 고민

대체로 직업 관료는 문제의 근본이나 구조에 대한 깊은 고민에 입각한 담대한 포부·비전·희망보다는 발등에 떨어진 불 끄기와 평가·계량이 용이한 계획과 실행을 중시한다. 그래서 경제정책의 방향을 수립하면서도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 문제"나 "경제체질 개선" 문제들에 대한 고민은 건성으로 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에 당면 현안 대응은 뛰어나다. 이는 한국 정치가 부실해서 생긴 문제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성장, 불평등, 일자리, 저출산 등 치명적인 현안들에 대해서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식의 진단과 대안이 무한 반복되고 있다.

예컨대 격차와 고용불안 문제에 대한 아우성이 들끓자, 노조, 공무원, 교수, 국책연구기관 연구자, 주요 언론·방송사 기자·피디 등 여론·정책 주도층—상당수는 포괄임금제를 적용 받으며, 2023년 3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을 주 69시간제로 왜곡하는데도 앞장섰다—은 정규직=정상, 비정규직=비정상이라는 도식을 만들었고, 문정부는 이를 적극 받아안아 공공부문과 대기업 비정규직을 일시에 정규직으로 만들었다. 문제는 한국에서 정규직은 주 40시간 이상 근로시간 보장+확고한 정년보장(정리해고와 징계해고 외에 중도퇴출 불가)+생산성과 무관한 가파른 연공임금체계+기업별 교섭에 따른 직무에 따른 기업횡단적인 근로조건 표준의 부재(대기업과 공공부문에서는 노조쪽으로 한참 기울어진 운동장)+두터운 기업복지+직접고용(간접고용은 비정규직으로 규정) 등 온갖 혜택을 누리는 존재라는 데 있다. 한국식 정규직은 상품과 기술의 수명이 짧아지고, 변화부침이 극심한 시장·기술 환경에서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존재이다. 하지만 이를 정상으로 간주하는 도식(고용노동 패러다임)을 만들어, 채용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직장계급사회)를 악화시켜, 구직·구혼을 앞둔 청년들을 기회와 희망의 사막으로 내던져 버렸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공공부문 규모 확대로 엄청난 특혜를 제공받은 사람들의 정치적 성향이나 연고는 불문가지일 것이다. 격차 문제도 비슷하다. 노조, 공무원, 교수, 언론·방송사 기자 등 기득권 노동이 누리고 있는 권리와 이익이 적정한지, 즉 생산성이나 하는 일(직무의 가치)에 상응하는지,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지를 묻지 않고, 상향평준화를 기조로 잡

으니, 내부자(기득권 노동)와 외부자(구직구혼 과정의 청년)를 가르는 성벽만 더 높아져 버렸다. 성안 진입 경쟁은 점점 살인적으로 되고,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결혼·출산 환경은 더 악화되었다. 첨단 기술 개발 분야나 수출 산업으로 가야할 이공계 인재들을 내수·규제산업(의약계 등)으로 쓸리게 만드는 유인보상체계로 인해 산업·기술 경쟁력은 점점 취약해져 버렸다. 노동개혁 과제로 거론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경직성, 고용임금의 공정성, 대졸 청년 취업난, 노조의 조폭화·귀족화, 공공부문의 방만화·비대화·양반화 등은 말할 것도 없고, 저출산, 사교육비, 입시 경쟁, 격차(불평등 양극화 이중화) 등 치명적 경제사회문제에 대한 진단과 대안도 비슷하다. 문제의 본질과 구조에 대한 비교·분석·통찰로 해야 할 원인 진단과 정책 처방을 이해당사자들의 아우성으로 해버리거나, 설문조사로 해버리니 예산 투입은 엄청나게 늘려도 문제를 악화시킨 경우가 적지 않다. 장기 경제 성장에 결정적인 악재인 초저출산 문제가 대표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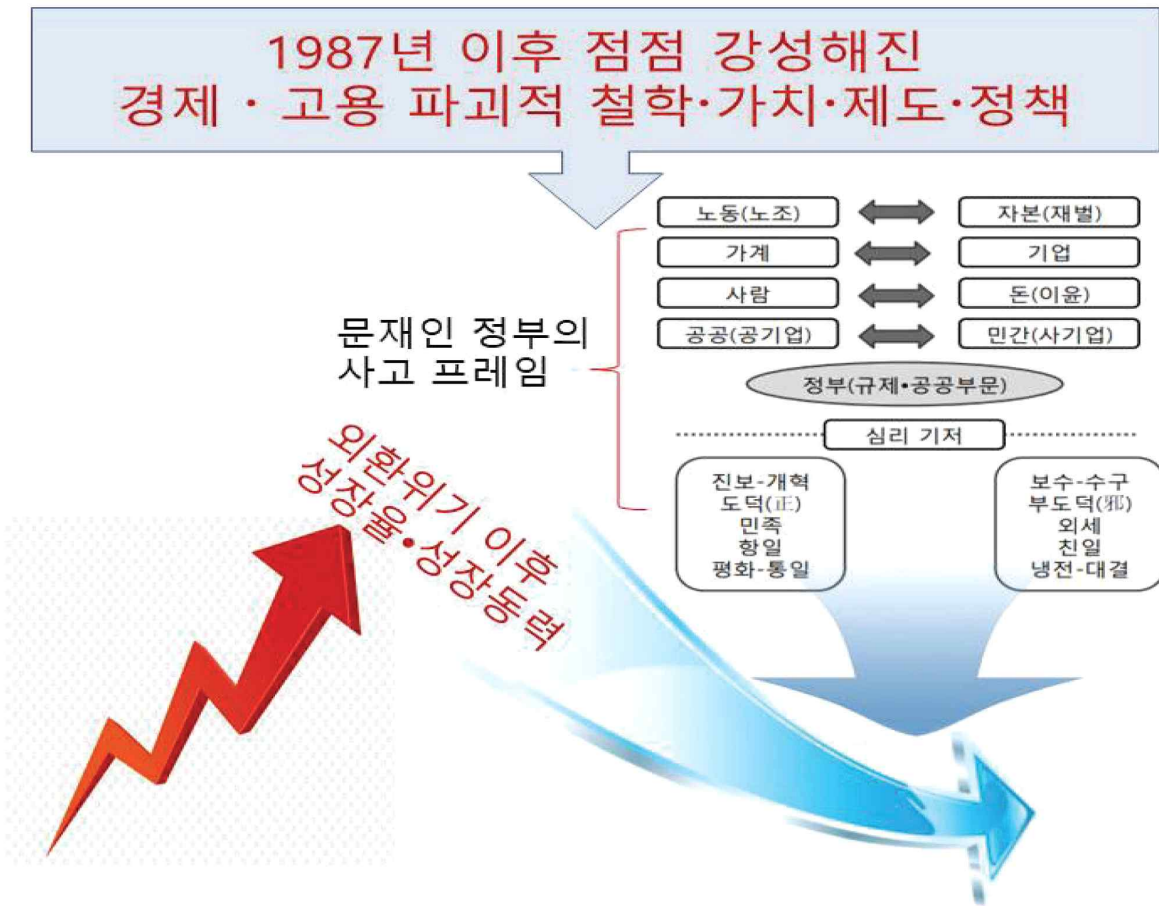
출생아 수 및 합계출산율 추세



*자료: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과제 및 추진 방향(2023.3.28.),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한국의 출생아수 급감(인구절벽)현상은 1차는 1982-->1984년, 2차는 2000-->2002년, 3차는 2015-->2022년에 일어났다. 1차 인구절벽은 1991~1995년 연 70만명 이상이 출생하여 인구 고원지대를 만들면서 별 문제시 되지 않았다. 하지만 2차는 외환위기 후폭풍과 그 외 여러 요인이 겹치면서 출생아수는 2000년 640,089명, 2001년 559,934명, 2002년 496,911명(합계 출산율 1.3명 미만), 2003년 495,036명, 2004년 476,958명, 2005년 438,707명으로 급감하였지만, 이후 거의 반등하지 않았다. 이에 노무현 정부는 2005년 5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제정하고, 9월 대통령 직속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출범시켰고, 5년마다 범부처대책을 담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해 왔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7월 발표된 총 197쪽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저출산"이라는 말을 24번 사용하였다. 국정과제 48번(미래세대 투자를 통한 저출산 극복)에서 "임기 내 초저출산 탈피 및 인구절벽 위기 극복"(출생아 수 45만명(출산율 1.4) 회복)을 공언하였다. 하지만 불과 1년 만에(2018년 7월) 저출생 대책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이름으로 정책 목표를 "출산율 높이기"가 아니라 "아이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것으로 전환하였다. 이 결과는 2017년부터 확인해진 3차 인구절벽이다. 정치의 기능부전으로 인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나 저출산 문제 등 많은 경제사회 현안들에 대한 진단과 정책 처방이 힘센 엘리트집단(공무원, 노조, 교수, 기자, SNS논객 등)에 의해 왜곡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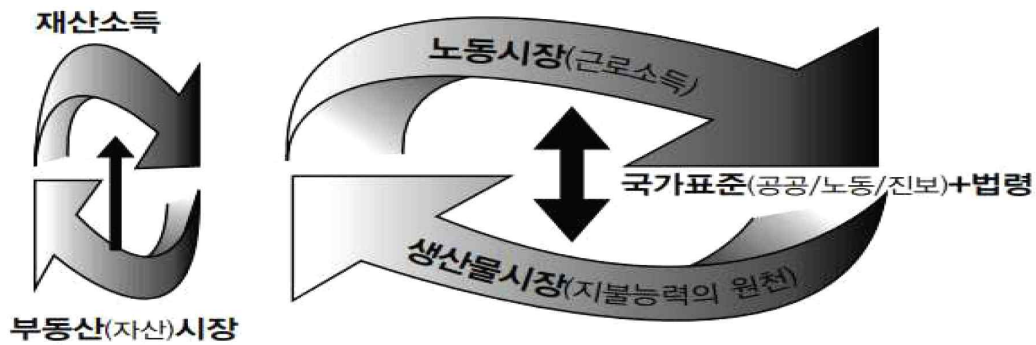
고, 경제(종합적 국가비전 전략 등)를 한번도 고민해 본 적이 없는 정치인(politician)의 안목에 갇히곤 했다. 윤정부의 경제·고용·노동 정책이나 저출산 대응 정책도 이런 문제를 고스란히 안고 있다.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 문제”나 “경제체질” 문제는 1987년 이후 점점 강성해진, 진보가 주도적으로 유포한 어떤 통념이다. 이는 세상을 자본-노동 프레임과 정(개혁·진보)-사(적폐·보수) 프레임으로 본다. 그러면 정책적 결론은 공공부문 고용 확대, 국가규제 강화, 국가독점 사업영역 확대=시장 영역 축소 등을 통해 사회공공성을 제고하고, 재벌의 불법부당한 갑질을 엄단하여 정의를 바로 세우고, 최저임금 대폭 상승을 통하여 가계소득을 증대시켜 사회양극화를 완화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률과 삶의 질(저녁이 있는 삶)을 보장하고, 비정규직 규제 및 엄격한 집행과 노조와의 연대를 통해 자본의 탐욕을 제어하고, 부동산 규제를 통해 투기도 제어하고, 의료 규제(비급여 영역 대폭 축소=문재인 케어)와 탈상품화를 통해 의료비를 절감하고 의료 공공성을 제고한다는 것이다. 그림으로 도식화하면 이렇다.



보수에게는 수구, 부패, 기득권, 친일 매국, 냉전, 반평화, 반통일, 세월호 은폐 조작 등 온갖 악덕을 다 덮어씌운다. 그리고 상위 1퍼센트 부자와 재벌대기업 비호·대변 세력으로 규정하여 이들의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권을 침해하려 한다. 자본-노동 프레임은 노동권 강화, 즉 재산권과

경제적 자유권에 대한 통제 강화를 진보와 개혁의 상징으로 보기에 노동(현재의 근로자)에 대해 온갖 보호 규제를 투하한다. 그러다보니 노동의 갑 중 갑이자 하는 일에 비해 월등히 높은 처우를 누리는 노동(공공부문, 대기업, 규제산업 근로자)이 최대의 수혜자가 된다. 이렇게 노동(근로자) 일반을 국가의 보호 대상으로 보고, 기업 구조조정을 기업주의 탐욕을 위한 불법 무도한 행위로 보면 위기에 처한 기업의 인력·사업 구조조정이 심각한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선진국에 비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훨씬 심각한 격차 문제는 민주진보나 자유보수가 공유하는 철학·가치의 산물이다. 단적으로 1인당 GDP의 배수로 교사, 공무원들의 임금을 따져 보면, 유럽이라면 200만 명을 고용할 재원으로 한국에서는 100만 명밖에 고용하지 못한다. 임금과 연금 자체도 높고, 불필요한 풀타임 정규직도 많기 때문이다. 사실 시야를 좀 더 확장해 보면 한국은 대기업, 규제산업, 공기업, 공무원 등 상층근로자 500만 명이, 선진국이라면 1천만 명이 나눠 먹을 파이를 먹는다. 이들의 요구·기대를 상향·팽창시키는 메커니즘을 도식화하면 그림과 같다.



요구·기대를 과도하게 상향·팽창시키는 것은 주로 생산물시장과 노동시장의 지대다. 문제는 한국의 국가규제와 표준(공공부문 보수체계와 고용 패러다임)은 이를 축소 제어하기는커녕 편승하고 공고히 한다는 것이다. 요구·기대의 거품을 키우는 것은 이 외에도 높은 집값과 교육비(사교육비와 긴 수학기간 등), 오랜 고도성장 경험, 과소비(허영)와, 공무원·교수·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주도하는 담론(프레임)도 빼놓을 수 없다. 또 하나는 변칙상속과 부동산시장에서 창출되는 거대한 불로소득이다. 이는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으로 변신하여, 역시 요구·기대를 과도하게 상향·팽창시킨다. 이런 문제들은 근본 문제라는 인식 자체가 없다.

7. 문제는 1987년 컨센서스

외환위기 이후 성장률과 성장동력을 떨어뜨린 것은 자유보수도 제대로 반박하지 못하거나 영합한 거대한 통념, 즉 1987년 컨센서스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① 건국·산업화의 그늘 해소를 시대정신으로 보기에 자학적 역사인식(대한민국 흑역사 집중 조명)이 필연이다. 미래비전이나 국가경쟁능력이 아니라 과거(자신들이 흘린 피·땀·눈물)가 정당성

의 원천으로 삼는다.

② 건국·산업화 주도(자유·보수·우파) 세력을 적폐로 간주하여, 청산·척결 하는 것을 반독재 민주화로 포장한다. 이는 대통령의 권한 약화, 국회·법원·지자체장 등 여타 권력기관에 대한 견제감시 소홀, 사회전반적으로 특수이익집단 강화를 초래했다.

③상응하는 의무나 부담은 생각하지 않고, 투쟁(시위농성파업)으로 자신의 권리와 이익을 상향시키는 것을 미덕으로 여긴다. 서로 사회적 약자임을 주장하며, 자신의 권익을 위해 투쟁하고, 국가에 보장을 요구하는 것을 당연시 한다. 이로 인해 노동-자본, 노동-비노동, 공공-민간, 현세대-미래세대 간의 권리(기회) 불균형이 심해졌다. 사회적 유인보상체계(권리·이익과 위험·부담의 균형)가 무너졌다. 그로 인해 세계적 두뇌(인재)의 미국 등 선진국 유출, 이공계 인재의 양과 질 저하(의약계 등 내수 규제산업 쏠림), 치열한 근로문화 약화 등이 성장동력을 치명적으로 약화시켰지만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지도 않는다.

④Anti these(반대·저지 담론)는 있으나 Syn these(창조·건설·성장)는 없다. 특히 선진국에서 수입한 자잘한 정책 담론(아이디어)는 넘치지만, 한국 역사현실과 치열한 대화를 거친 새롭고 종합적인 국가발전담론(비전)이 없다.

그 외에도 반시장·반재벌 경제민주화(재벌대기업의 부는 노동착취, 협력업체 약탈의 결과), 공공성 강화라는 미명하에 국가규제와 공공부문 확대, 의무·부담을 고려하지 않은 기본권(특히 노동권 등) 상향, 젊은 남성 전체를 성범죄자로 간주하는 페미니즘, 자유경쟁과 시장원리(소비자 선택권과 공급자 간 경쟁)의 그늘만 주목한 국가규제 강화, 대한민국의 바뀐 위상과 엄존하는 지정학적 위험에 대한 무지(인지부조화), 북한의 선의(낭만주의)에 의한 평화와 비핵화, 반일친중(탈미 내지 동북아 균형자) 등임. 우물안 개구리적 세계인식, 일본에 대한 한풀이와 혈연적 민족주의; 과도한 조선 미화-독립운동 침소봉대-일제의 긍정적 역할 전면부정-戰前 일본과 戰後 일본 동일시하는 것 등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1987년 컨센서스를 받아, 자유보수 세력이 사분오열, 지리멸렬한 틈을 타서 거칠게 실행하였다. 그 결과 문정부가 체현한 경제·고용 파괴적인 철학·가치들은 그 패악을 극명하게 드러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시대나 박정희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 철지난 철학·가치들은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다. 사실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인 문제"의 상당수는 여기서 발원한다. 이 중에는 경제 통계로는 잘 잡히지 않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는 중차대한 문제들이 수두룩하다. 대표적인 것이 두뇌 유출과 첨단 기술분야 및 수출산업 쪽으로 오는 인재의 양과 질이다.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근본적 문제"나 "악화된 경제체질"에 대한 분석은 좀 더 심도깊게 이뤄져야 한다.

8. 결론: 경제(經濟)를 넘어 경세(經世)를, 법치를 넘어 정치(政)를, 정책을 넘어 정무를!

윤정부 노동개혁 1번 타자나 다름없는 근로시간제 개편안이 "주69시간제" 프레임이라는 변화구를 쳐내지 못하여 삼진아웃된 현실은 깊은 성찰반성이 필요하다. 현재의 정치지형과 (1987년 컨센서스가 지배적인) 이념지형에서 노동개혁은 관료나 학자들이 서투르거나 백안시하는 정무적 기교가 절실히 필요하다. 반칙과 암수가 난무하는 싸움에서는 무술 도장에서 배운 무예가 통하지 않듯이, 현재 한국의 독특한 정치지형과 이념지형에서는 관료와 학자들의 소신·양심과 식견(글로벌스탠다드)이 잘 통하지 않는다.

1) 외교·안보·대북 전략처럼 노동개혁도, 대통령주재 심도깊은 전략전술 토론회를 통해 노동개혁의 단기(총선 전) 및 중장기(총선 이후) 목표와 국회 지형(법 통과 가능성)과 정치적 득실(여론과 언론 등)을 종합한 개혁 로드맵(전략전술)을 정립해야한다. 이는 연금, 교육, 공공, 방송(언론), 사법, 정치개혁도 마찬가지다.

2) 노동현장 구석구석에서 불법행위와 부정비리를 샅샅이 찾아서 엄단하여, 법과 원칙이 흐르도록 하는 것이 총선 전 노동개혁의 핵심이다. 한마디로 법치주의 노동개혁이 핵심이다. 노동·노조 개혁의 성격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 ① 노조 불법행위와 노동현장 부정비리 엄단(법치 확립)
- ② 기업과 지자체의 노조 편익 축소 혹은 철폐
- ③ 노조의 자금줄 죄기(체크오프 시스템 개혁과 회계 투명성 제고)
- ④ 노조의 흥측한 얼굴 폭로(노조 권위 실추 및 사회적 고립화)
- ⑤ 공공부문 고용임금복지 및 노조 개혁
- ⑥ 임금체계 공정성 제고(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 ⑦ 노동시간 유연성 제고
- ⑧ 고용(채용해고) 유연성 제고
- ⑨ 노사간 무기의 대등성 확립(파업시 사업장점거 제한 및 대체근로 허용 등)

⑥임금체계, ⑦노동시간, ⑧고용유연성, ⑨노사 간 무기의 대등성 개혁은 노동개혁의 종착점이자 글로벌 스탠다드이긴 하지만, 현 국회지형과 언론·여론 환경상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안이나 말로 문제제기를 할 수는 있다. 하지만 정치적 이해득실을 냉정하게 따져야 한다. ①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가장 잘 할 수 있고, 여론 지지율(정치적 이득)도 높다. ①을 간판으로 삼고, 이를 심화 확대해야 한다.

②는 사용자 단체와 함께 실태파악에 먼저 착수하여 여론전부터 벌여야 한다. ③노조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적 자치기구인 노조의 회계장부를 제출하라는 것은 큰 명분도 없고, 벌칙도 약하고(과태료 최대 500만원), 설사 회계장부를 제출 받는다해도 노조개혁 효과는 별로 없다. 반면에 노조 전체를 적대시한다는 느낌을 줄 수가 있다. 노조 체크오프(check-off, 사용자의 일괄 공제) 시스템을 CMS로 바꾸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하고, 노조에 적지않은 타격을 줄 지도 모른다. 하지만 노조 전체를 적대시 하는 인상이 있어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④와 ⑤는 충분히 가능하고, 쉽고, 의미도 있지만 제대로 된 적이 없다. 이를 위해서는 노조관련 통계를 좀 더 정확하고 풍부하게 생산하는 것이 첫걸음이다. 매 연말에 발표하는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의 조사 항목을 늘려야 한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용역으로 처리할 일이 아니다. 당연히 공공부문 노조 관련 통계부터 정비해야 한다. 노조는 원래 근로조건에 대한 시장과 경쟁의 압박을 방어하기 위함인데 시장과 경쟁의 압박이 거의 없는 공공부문 노조 조직률은 실제 보다 과소하게 집계되었다. 단적으로 가장 최신통계인 <2021 전국노동조합 조직현황>에 따르면 공공부문(기재부 산하 371개 공공기관)은 30만 7천명, 공무원 부문은 37만 5천명, 교원 부문

10만5천 명으로 세금·건보료나 정부 통제=보장 요금으로 사는 공무원·교원·공공기관 노조원은 총 78만 7천 명이다. 그런데 (공공기관에 지배되는 협력업체를 빼고도) 실제로는 100만 명이 넘는다. 단적으로 지자체 산하 수많은 공공기관(임직원이 1만 6천 명이 넘는 서울교통공사 등)과 공운법 적용 대상도 지자체 산하도 아닌 KBS, EBS, MBC,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서울대학교 등과 지자체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는 무슨 센터나 준공영 버스회사도 공공부문이다. 또한 공공기관이 지배적인 고객인 협력업체도 포함해야 한다.

공공부문이 출신수범할 것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철밥통 화가 아니라, 조합원과 국민에게 자신들의 근로조건과 조합비 사용 내역을 상세하게 공개하는 것이다. 체크오프 시스템을 CMS로 전환하는 것도 공공부문부터 시행해야 한다. 공공부문 개혁의 첫 단추는 공공부문의 임금및 근로조건에 대한 수평 비교(국제비교와 공공기관별 비교)와 수직(원하청) 비교이다. 그리고 노조 있는 기업의 시장 및 산업 특성을 파악하고, 외국의 비슷한 산업기업과 근로조건을 비교하는 것이다.

3)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정부는 소외된 사회적 약자 및 취약 근로자의 고마운 친구이자 2천만명이 넘는 근로자 전체의 진정한 대변자로 각인시키는 다양한 이벤트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어떤 경우에도 이 점을 놓치면 안된다.

노동·노조 개혁 목표	법적 실행	국회 통과	여론 호응 (총선보탬)
①노조 불법행위와 노동현장부정비리 엄단(법치 확립)	○		○○
②기업과 지자체의 노조 편의 축소 혹은 철폐	○		△
③노조체크오프 시스템 개혁과 회계 투명성 제고	○		△
④노조의 흉측한 얼굴 폭로(권위·신뢰 실추및 고립화)	○		○
⑤공공부문 고용임금복지 등 개혁(양반적 지위 혁파)	△		○
⑥임금체계 공정성 제고(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X	X	○
⑦노동시간 유연성 제고(탄력·선택·연장 근로제 개혁)	X	X	X
⑧고용(채용·해고) 유연성 제고	X	X	X
⑨노사 간 무기의 대등성 확립	X	X	○
⑩윤정부는 80~90% 서민과 취약근로자 대변자 행보	○	○	○○

4)문재인 정부의 경제고용 적폐는 1987년 이후 점점 강성해진 민주진보의 철학, 가치, 정책의 산물이다. 탱크는 소총으로 대응할 수 없듯이, 시대착오적인 철학·가치·제도·정책은 관료들이 만지작거리는 소소한 정책이나 예산으로 대응할 문제가 아니다. 역사·이념 전쟁(박근혜정부가 시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등)을 교육부·문체부 공무원으로 수행하면 안되듯이, 노동개혁이나 저출산 대응도 마찬가지다. 이는 내러티브(서사), 이념, 정책, 정무(프레임, 레토릭) 등이 다 결합되어야 한다. 레토릭(rhetoric)은 말하는 기술이나 미사여구가 아니라, 관심이나 이익을 이념(ideas)과 연결시켜주는 교량이다. 적절한 레토릭과 적합한 프레임 없는 주장은 대중적 설득력이나 공감대를 만들어 낼 수 없다.

5)윤대통령과 윤정부는 말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실 대통령실, 정부, 여당은 말·행동·조직문화 등에서 관료적 특성을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관료는 작은 것 하나라도 성과

를 내는 것을 중시하기 때문이어서 인지, 법과 원칙에 따라 자신의 방침과 정책을 군더더기 없이 말하는 것이 체질화되어 있다. 1945년 해방 직후 미국 맥아더 포고령과 소련 차스차코프 포고문은 관료=군인의 말과 선전선동가인 정치군인의 말이 어떻게 다른지 잘 보여준다. 윤정부의 말은 맥아더와 닮았고, 문정부의 말은 차스차코프와 닮았다. 물론 점령군처럼 말한 미국은 자유와 문명 세계를 가져왔고, 해방군처럼 말한 소련은 노예와 야만 세계를 가져왔지만, 이 말 때문에 지금껏 미군은 점령군, 소련군은 해방군이라는 선동이 먹히고 있다.

6)요컨대 고용위기 진단은 경제학으로, 대안은 정치학으로, 실행은 심리학과 마케팅으로 해야 한다. 윤정부의 개혁은 경제(經濟)를 넘어 경세(經世)의 관점에서, 법치를 넘어 정치의 관점에서, 정책을 넘어 정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끝-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종합토론

천양하

용인대 시학부 교수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토론문]

천양하

용인대 시학부 교수

고용위기는 일부 산업이나 지역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지만, 앞에서 말씀하셨 듯글로벌 경제의 불황이나 산업의 구조적 변화, 저출산 등으로 인해 장기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이 중에서 저는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급변하는 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1. 새로운 산업과 직업 창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산업과 직업을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정부는 새로운 산업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지원하고, 기업들은혁신적인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취업 지원 프로그램 및 국제 협력 강화

정부나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취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이는 급변하고 있는 산업 등으로 구직자에게 직업 교육, 취업 상담, 취업 정보 제공 등을 포함으로써 지식의 격차를 좁히고, 새로운 사업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고용위기는 국제적인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고용위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고, 국제적인자원과 기술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노동시장 유연성 확대:

마지막 산업 구조 변화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지고 새로운 산업이 생기면서 발생하는데 이에 맞는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법규와 제도를 개선하여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일례로 주변에서 회사를 입사하고 퇴사하고를 반복하는 친구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육아휴직, 포괄임금제 등의 헛점을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제도들 때문이다. 인크루트에 따르면 근로자의 날에 10명중 3명이 근무를 한다. 휴일근로 수당이나 보상이 없는 근로자가 39%에 해당된다. 원래는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면 유급휴일포함 150%를 더 지급하게 되어있는데 5인 이하의 기업에서 이를 지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한다.

토니블레어 제3의길, 슈레더 어젠다 2010, 하르츠 노동개혁

상기 정책들의 핵심은 실업률을 잡고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고용의 유연성을 전제로 노동정책을 전개했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 그 과실의 수혜는 기업들에게 귀착된 반면 노동자들에게는 고용불안정과 실질임금의 하락이라는 씁쓸한 빈봉지가 돌아갔을 뿐이다.

시장실패의 극복을 위한 정부개입을 두들겨 패면서 1970년대부터 오늘날까지 전세계를 풍미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국가권력의 시장개입을 비판하고 시장의 기능과 민간의 자유로운 활동을 중시했는데 상기의 정책들은 신자유주의의 이론적 뒷받침에 의거해서 창출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합리적기대를 전제로 예측가능한 금융정책의 미조정 외에는 시장에 맡긴다는 고전경제학의 수정판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경제시스템은 그동안 다방면에서 매우 많은 문제들을 양산해왔다.

지금은 시장중심적 사고의 극복 및 사회적 관계회복 측면에서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전정권에서는 과연 어떤 문제의식을 갖고 어떤 대안을 노동자들에게 제시했는가에 대한 처절한 반성을 해야 한다.

현 정부에서는 정량적 분석을 위한 계수적 개선에 천착하기 이전에 노동자들의 입장에서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내년에는 좀 더 희망적이고 발전된 정책, 소식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토론문]

김이석

시장경제제도연구소 소장

윤석열 정부 1년간의 고용·노동정책에 대한 평가를 주제로 한 김대호 사회디자인연구소 소장의 발제문을 읽어보면서 몇 가지 점에 일단 동의한다는 것을 밝힌다.

우선 김 소장은 ‘5. 문재인 정부의 제대로 규명·폭로되지 않은 경제·고용 적폐’에서 “관료 출신들은, 국민에게는 큰 악덕이나 관료 특유의 미덕, 즉 부정비리가 아닌 한 권력의 지시를 이행한 전임자의 잘못은 가능한 들추지 않는 관행으로 인해 문정부의 경제고용 적폐에 대해서는 함구하다시피 하니, 심각한 문제들이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진단했는데 여기에 동의한다.

사실 문 정부 당시에 터져 나왔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 등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 오히려 더 조용해진 감이 없지 않다.

김 소장은 발제문에서 그런 문 정부의 경제 적폐로 공공일자리 급증, 비정규직 제로 추구,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취해진 최저임금 인상, 노조조직률 폭증을 지적했다. 그리고 노조조직률보다 민노총이 “종북·반미·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외곽 대중조직이라는 사실” 자체가 중대한 문제라고 봤다.

김 소장은 한국에서 노조는 “자신이 누리는 높은 권리이익을 정당화하기 위해, 최저임금 폭등, 융통성 없는 52시간제 고수, 박근혜정부의 2대지침 폐기, 대기업 및 공공부문의 정규직=철밥통 정상=표준화 등 노동·연금·교육개혁 저지와 공공·언론방송 개혁 저지의 주력군”이라고 했다. 한마디로 관행적으로 행하는 양대 노총의 ‘파괴적 창조’라고 부를 만한 쇄신이 없이는 윤 정부의 노동개혁은 물론 여타 개혁들도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들린다.

아무튼 이런 인식에 공감하면서, 토론자의 노동과 고용 분야에서의 윤 정부 1년을 짧게 요약해보라고 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화물연대 파업에 직면해서 윤 정부가 ‘법과 원칙’을 앞세우면서 정면대응을 한 결과 윤 정부 초창기에 정부를 흔들려는 시도가 먹히지 않게 되었고, 연이은 건설현장에서의 노노갈등과 폭력근절 등의 운동을 이어갈 수 있었다.

민노총 간부들의 간첩활동은 다행이 윤 정부 1년 동안 국정원의 수사로 일부 밝혀지게 되었는데 이것도 문 정부가 하지 못했던 성과의 하나일 것이지만 향후 이런 간첩활동은 반드시 발본색원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노동시간 유연화는 윤 정부의 고용노동부가 최근 내세웠지만, ‘주당 69시간 근로제’라는 프레임과 근로자의 건강권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프레임에 단단히 걸려들어서 더 이상 진척되기 어렵게 되었다. “근로시간도 법률로서 일률적으로 정해 ‘규제’하기 보다는 근로자 개개인의 자율적 결정을 존중하겠다”는 프레임으로 갈 수 없었는지 매우 아쉽다. 아무튼 다양한 노동 유연화 조치들은 시도도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엉거주춤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노조의 ‘회계투명성’과 관련해서 김 소장은 그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크게 평가하지 않는 것 같다. 발제문의 많은 내용에 동의하지만 이 부분에 대한 토론자의 생각은 다르다. 노조야말로 ‘민주화’가 어느 곳보다 필요한 곳이다. 노조의 민주화는 파업 등과 같은 강경투쟁 일변도로부터 노조가 벗어나게 하는 데 크게 일조할 수 있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의 확보도 노조 민주화로 가는 중요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기에 토론자의 생각으로는 노조회계 투명성은 앞으로도 추진돼야 할 중요한 노조개혁의 하나이다.

향후 노동개혁을 포함해서 정부가 생각하는 매우 중요한 개혁들에 대해서는 범정부적으로 이를 꾸준히 점검하고 추진하는 곳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아울러 이를 홍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사실 대치 정부가 ‘민영화’에 성공한 배후에는 반대논리가 나올 때마다 이를 무력화시키는 새로운 논리를 개발하고 이를 일반 국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잘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대치 정부는 그 어느 정부 때보다 홍보비를 많이 썼다고 한다.

김 소장은 결론에서 “노동개혁은 내러티브, 이념, 정책, 정무가 다 동원되어야 한다”면서 “경제(經濟)를 넘어 경세(經世)의 관점에서, 법치를 넘어 정치의 관점에서, 정책을 넘어 정무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동의한다. 정확한 경제학적 분석이 밑바탕이 돼야겠지만, 결국 필요한 개혁을 이뤄내려면 결국 국민 설득에 지금보다 수십 수백 배의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개혁에 반대하는 온갖 엉터리 분석과 선전·선동을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세션 2

II. 산업·에너지 위기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발제 1

글로벌 에너지 시장 변화에서의 정책과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

글로벌 에너지 시장변화에서의 정책과제

2022. 5. 4(목)

정 범 진
경희대학교 원자력공학과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에너지위기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2022. 2. 24)
- 천연가스 공급중단
 - 서방세계의 우크라이나 지원에 대한 보복
 - Nord Stream #1의 누설
 - 천연가스 공급의 무기화
- 유럽국가의 현물시장 물량확보
 - 유럽이 개도국으로 갈 연료를 구매
 - 다른 에너지원 가격인상. 국제가격 인상
- 유럽의 에너지수요 증가
 - COVID-19 pandemic 극복
 - 동절기 대비 (천연가스 비축 90% 확보 필요)
- 수요대비 공급부족 → 에너지 위기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노르드 스트림 1·2

Nord Stream pipelines from Russia

Leaks detected on both pipelines near Bornholm



Source: Gazprom, MarineTraffic, NAVTEX

- 노르드 스트림 1
 - 총 연장 1,200km
 - 발틱해저 (St. Petersburg - 북동부 독일)
 - 2011 운영개시
 - 최대 170M m³/day(mcm/d)
- 노르드 스트림 2
 - 노르드 스트림 1과 평행배치
 - 독일의 운영허가 지연상태
- 천연가스 공급상황
 - 170M m³/day → 40M m³/day (2022. 6).
 - 10일간 정지후 20M m³/day 로 재가동 (2022. 7).
 - 완전정지 (2022. 8)
 - Nord Stream 1·2의 4개 지점 누설
 - 해저폭발 관측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유럽의 가스가격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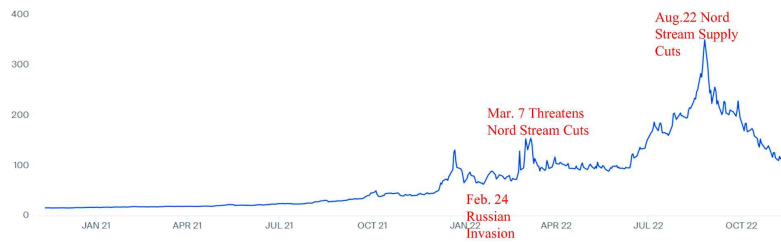
Energy | Natural Gas

ICE Index

Dutch TTF Gas Futures

CONTRACT	LAST	TIME(GMT)	% CHANGE	VOLUME
DEC22	98.500	11/11/2022 4:59 PM	-13.179	35390

INTRADAY 3 MONTHS 1 YEAR 2 YEARS LAST UPDATE TIME: 11-12-2022 2:09 AM GM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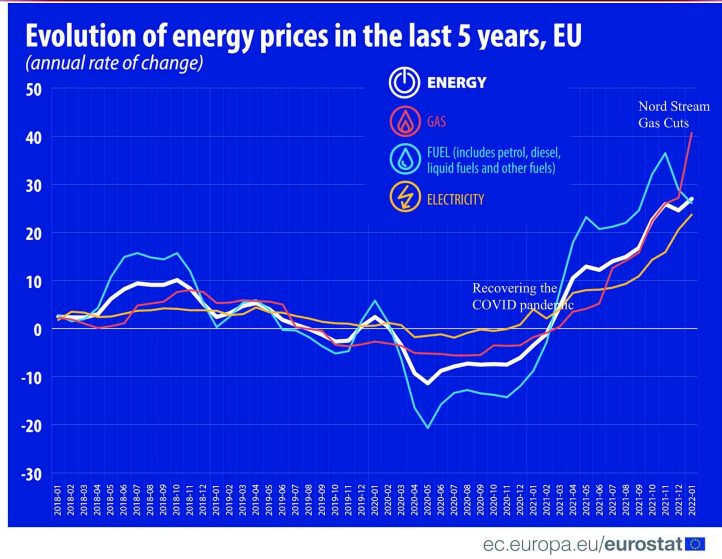


Title Transfer Facility (TTF) is a pricing location within the Netherlands. The TTF price serves as a pricing proxy for the overall European LNG import market.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유럽의 에너지 가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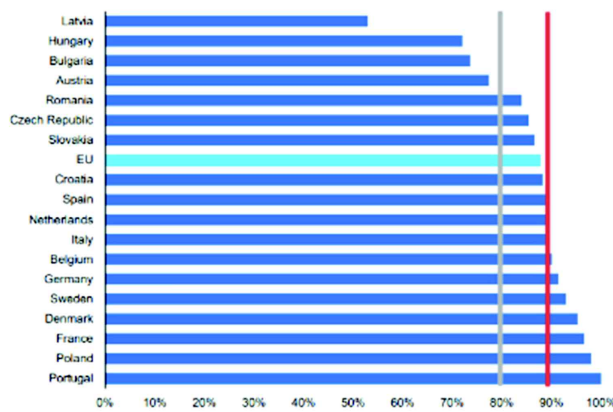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EU 천연가스 비축

EU gas inventory levels stood at 87% of their working storage capacity on 26 September 2022

Natural gas inventory levels as a percentage of working storage capacity in EU member states, 26 September 2022



Source: IEA analysis based on GIE (2022), *Aggregated Gas Storage Inventory*

IEA CC BY 4.0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유럽 에너지가격 폭등

Exhibit 9: Currently, the German power price is c.€600/MWh, from just over €40/MWh in early 2020
Germany 1-year forward power price evolution (€/M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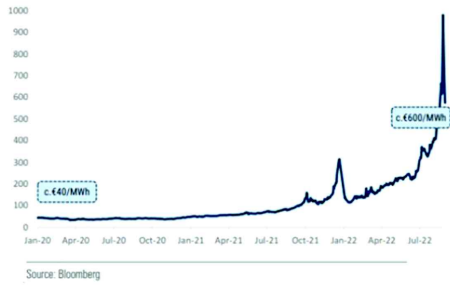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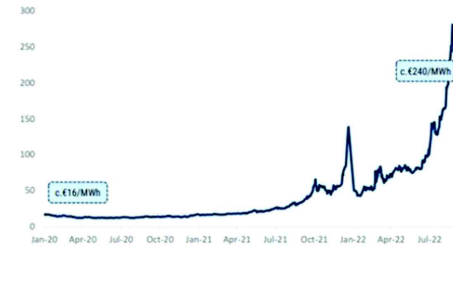


Exhibit 10: The gas TTF price is now c.€240/MWh, from c.€16/MWh in Jan 2020
TTF 1-year forward price evolution (€/MW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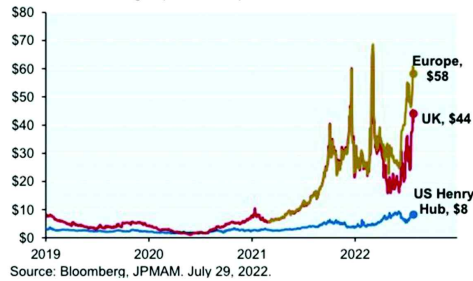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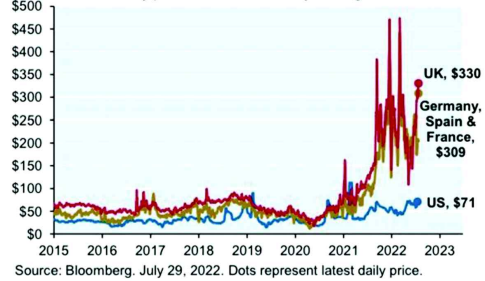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가격 비교

The US-Europe natural gas gap
Wholesale natural gas price, US\$ per MMBTU



The US-Europe electricity gap
Wholesale electricity price, US\$/MWh, 7 day average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에너지 정책과 원칙

- 1980년대 석유파동
 - 에너지가 항상 구할 수 있고 싼 것이 아니다.
 - 에너지는 무기화될 수 있다.
 - 에너지 정책의 필요성
- 에너지 정책의 두가지 중요한 원칙
 - **안정성과 경제성** (Available and Cheap)
 - 에너지원 다변화 정책
- 최근 추가된 원칙
 - **기후변화** (← 기후온난화)
 - 이산화탄소 저감 (← 온실가스 저감)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9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에너지 정책의 문제

- 에너지안보의 중요성 망각
 - 러시아산 값싼 석유와 가스 향유
 - 유럽국가간 전력망 연결
 - 에너지 경제가 에너지 정책을 대체
 - 가격만 중요
 - 천연가스 의존도 과다 (다변화원칙 위배)
 - 천연가스 발전소 증가
 - 유럽 가스의 50%를 난방에 사용
 - 추가된 원칙이 주요 원칙을 압도
 - 이산화탄소 저감이 에너지 안보와 경제성 보다 중요
 - 재생에너지로 인한 사회적 부담 증가
- ※ Climate change may be a doubtful long-term issue. But it got priority.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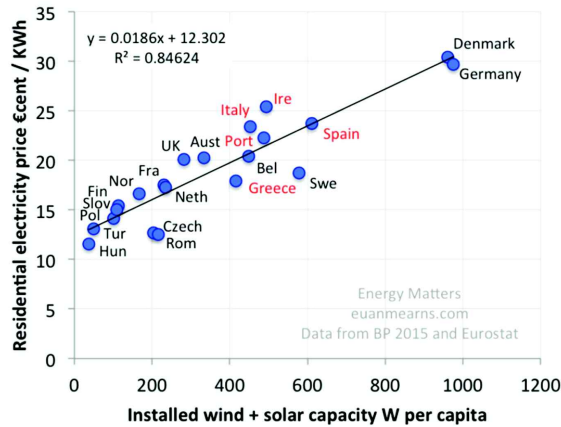
10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재생에너지공급과 전력가격

Europe Electricity Price v Installed Wind + Solar Capacity



- Deployment of premature and expensive technology
- Climate change is more important than energy security?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가능한 시나리오

- 전쟁 종료
 - 곧
 - 지속
- 러시아 가스공급
 - 재개
 - 중단
- 가스공급이 재개된다고 상황이 끝나는 것 아니다.
- 가스공급의 중단으로 에너지 정책의 취약성이 발견된 것
 → 에너지정책 정상화 필요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문제 - 재생에너지

-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대세론
 - 높은 가격(보조금, 세금감면)
 - 변동성 → 급전불응 속성 → 예비발전시설 필요성
 - 간헐성 → 전력망 안정화 대책 필요
 - 가장 좋은 수단 밀어내기 (원자력)
 - 원전 대신 석탄(독일)
- 목적과 수단의 도치
 - 목적: CO₂ 저감
 - 수단: 재생에너지 확대
- 자발적 위기
 - California 정전 (2020. 8.)
 - Texas 정전 (2021. 2.)
 - 영국 풍력감소 (2021. 9.)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13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문제 - Infrastructures

- 전력산업 민영화
 - 발전회사 → 신규건설보다 100% 운영 선호
 - 종사자 증가 (발전, 송전, 배전) → 비용증가
 - 배전업자의 발전사 압박(가격)
 - 단기 값비싼 전원(가스)을 장기 값싼 전원(원전)보다 선호
 → Infrastructure 투자감소
- 다른 규제
 - 건설, 안전, 노통, 복자, 자국산 사용, 자국노동자 등
 - 신규건설 비용 증가
 → 신규건설 기피
- EU energy mix에서 원전비중 감소
 - Chernobyl 충격
 - Renewable penetration 증가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14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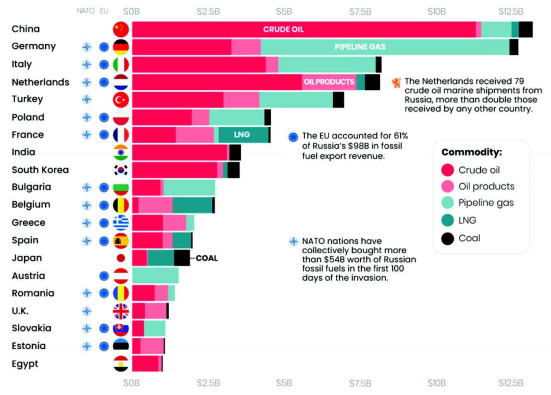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



Who's Still Buying Fossil Fuels From Russia?

IMPORTS IN FIRST 100 DAYS OF THE INVASION: FEB 24TH - JUNE 4TH



- 중국, 인도, 기타
- 대중국 의존도 증가
- 미국도 핵연료 수입
- ☞ 에너지무기화 성공?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사우디아라비아 기습 석유감산

사우디 기습 석유 감산에...미국, 부글부글해 도 꼭 참는 까닭

중앙일보 | 입력 2023.04.04 15:07 업데이트 2023.04.04 15: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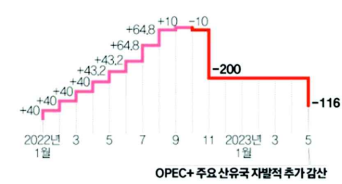
이승호 기자 [구독](#)



조 바이든(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AFP-연방뉴스

OPEC+ 원유 증감산량 조정 추이

단위: 만 배럴(일일 생산 기준)
* OPEC+ 월례 장관급 회의에서 합의된 생산량
(월별 실제 생산량과는 차이가 있음)



자료: 로이터, 석유수출국기구(OPEC) The JoongAng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우리나라의 상황

- 발전단가 (비중)
 - 원자력 60원/kWh (30%)
 - 석탄 80원/kWh (40%) → ~150원/kWh
 - LNG 120원/kWh (20%) → ~300원/kWh
 - 재생, 기타 220원/kWh (10%)
 - 공급단가 ~110원/kWh (2022년 19원인상, 2023년 13원 인상)
- 난방비 폭탄 (~50% 증가)
 - 탈원전 정책 계속했으면 전기요금은 500% 증가했을 것
- 탈원전 정책
 - 2022년까지 한전 적자 32조6034억원, 2023년 예상 영업손실 6조원
 - 허약해진 에너지 시스템: LNG 증가, 재생에너지증가(제주, 전남 과도)(더욱 확대하는 것이 문제), 고리2호기 등 6기 가동중단
 - 탈원전 정책 지속 : RE100, 제10차 전력수급계획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17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제10차 전력수급계획

- 신규원전 없다. - 물량도 못(안) 잡나?
- 천지1·2호기, 대진1·2호기 부지 없었다.
- 모수를 줄여서 원전30% 공약을 맞췄다.
- 신규원전 부지에 대한 계획이 全無
- 사용후핵연료 문제해결 -> 법안 마련으로 문제 바꾸기
- 한전적자 : 이자까지 갚아야 하나 (국민볼모)
- 가장 큰 문제는 적자요인을 유지
 - 재생에너지 지속건설
 - 한전공대
 - 간년도 전력수급계획 → 계획 없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18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문제 - 미래전망

- 러시아의 남은 에너지 무기
 - 석유, 석탄
 - 핵연료
- 에너지위기의 의미
 - 가난한 나라에게는 공급부족을 의미
 - 에너지 위기는 다른 나라로 전파
 - 부자나라는 에너지확보, 가격만 상승
 - 재생에너지는 연료가 필요 없지만 높은 가격(=에너지 위기)
- Local solution을 Global problem에 적용한 결과
 - 재생에너지 확대
- 신규원전 건설의 어려움 여전
 - 혁신적 탈 규제 필요
- EU 국가들의 에너지 정책 변화 필요 → 시장변화
 - 자원
 - 원전수출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19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윤석열 정부의 비전 - 정상화

- 에너지계획의 원칙: 안정적 공급 + 사회적 비용 최소화
 - 안전과 깨끗?
- 그린 워싱
 - CO₂저감 ≠ 재생에너지 보급 (재생에너지 보급 끝지면 어떤가?)
 - 숲을 파괴한 태양광이 친환경?
 - RE100 → CF100
- 전력수급
 - Load duration + Screening curve
 - 량이 아니라 需給
 - 전력수요의 과대/과소 예측
- 정부계획
 - 기존정책 적폐취급, 법과 장기계획도 바꾸는 무도함
 - 스스로 포기한 예기본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20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도전

- 탈원전 정책 후유증
 - **한진 적자보전**
 - 원전산업 : 생태계 부활, 수출관련 대외신인도 (졸속 정책 우려감), 원전 건설부지 해제(천지1·2호기, 대진 1·2호기), 사용후핵연료
 - 에너지 믹스 왜곡
 - 기 건설/계획된 태양광과 풍력에 대한 대책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 석유, 석탄, LNG 등 에너지가격 폭등
 - 에너지 공급안정성에 대한 우려 → **자각**

- 탄소중립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 계산되지 않은 NDC2030 목표
 - 무모한 탄소중립 2050계획: 기술적 타당성과 비용
 - 원전수출 한·미 공동 진출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21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

- 청정에너지 Top3 기술강국 실현
 - **대형 및 소형 원전 경쟁력 제고**
 - 수소에너지 기술 육성
 - 배터리 신기술, 수송용 발전용 연료전지 기술, 차세대 태양광 기술 개발
 - 디지털 기반 에너지 신산업 육성, 소재/부품·장비 분야 혁신기업 육성
- 탄소중립 적극 추진
 - **원자력 기저발전**으로 한 재생에너지 확충, 청정에너지 안정적 공급확대
 - 탄소저감 R&D투자, 미세먼지 30% 감축
- 탈원전 정책 폐기, 신재생에너지 및 원자력의 조화추진
 - **신한울34호기 건설 즉시 재개, 원전산업 생태계활성화 및 기술력 복원**
 - 2030년 원전 최초 운영허가 만료 원전의 계속 운전 검토
 - 과학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해 NDC 이행계획, 단계별 적정 에너지 믹스 수립 및 추진
- 한미 원자력동맹강화 및 원전수출을 통한 일자리 10만개 창출
 -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 활성화
 - **SMR 개발사업 수출지원 및 규제선진화** 국제협력 방안 모색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22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원자력 관련 정책 方向/內容 (1)

- 에너지 안보 및 탄소중립의 수단으로 원전역할
 -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2025)
 - 원전 10기 계속운전
- 원전 수출산업화 / 생태계 경쟁력 강화
 - 2030년까지 원전10기 수출
 - 원전수출전략추진단, 수출대상국 거점공관
 - 원전담당 차관보, 원전수출정책관
 - SMR 개발, 수출지원
-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의 차질없는 이행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련 국무총리 산하 전담조직
 - 파이로프로세싱 한미 공동연구(JFCS) 마무리
 - SFR-파이로 한미협력 강화
 - 소내 건식저장시설의 확보추진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23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원자력 관련 정책 方向/內容 (2)

- 국민체감/신뢰하는 원자력안전
 - 원안위 전문성·독립성 확보
 - 원안위 (가칭) 제도 및 현안협의체 설치
 - SMR 등 규제체제 선제적 준비
- 차세대 원전 기술·산업경쟁력 강화
 - 독자 SMR 노형개발
 - 가동원전과 연계한 수소생산 실증
 - 비경수형 원자로 핵심기술역량 제고
 - 핵융합 실증준비 (2050 전력생산 기여)
 - 방사선 기술·산업 전략적 육성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24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에너지 관련 정책 方向 / 內容

- 에너지믹스를 합리적으로 재정립
 - 원전, 재생에너지 조화
 - 석탄, LNG 합리적 감축유도
 - 에기본(2022년 3분기), 제10차 전기본(2022년 4분기)
 - NDC 준수
- 재생에너지 안정적 공급
 - 태양광 분야 **글로벌 리더쉽**
 - 태양광/풍력 산업생태계를 고려한 **보급 지속추진**
- 고효율 저소비형 에너지구조/수소 등 에너지 신산업
 - 원전수소
- 기타
 - 전력망 적기건설
 - 에너지 시장구조/독점판매구조 해소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25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웨스팅하우스 소송

아주경제 2022.10.25.

한전·한수원, 美 웨스팅하우스 소송에 '골머리'

업계에서는 폴란드 원전 수주전에서 한수원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것으로 예상되자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통해 견제에 나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제 막 웨...



- 원전 전문가 "美 웨스팅하우스, 韓 한수원 소송은 ... 녹색경제신문 2022.10.25.
-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 한수원에 소송, 韓... 비즈니스포스트 2022.10.25.
- '원전 수출' 시동 건 한수원에 압초...美... 노컷뉴스 2022.10.25. 네이버뉴스
- 한국 원전, 폴란드 수출 목적인데 美 웨스팅하우... 중소기업신문 2022.10.25.

관련뉴스 20건 전체보기 >

동아일보 PICK A6면 1단 2023.04.06. 네이버뉴스

美, 한수원 원전 체코 수출 신고서 반려... 사실상 수출 제동

한국형 원전인 APR1400의 기술 소유권을 두고 한수원과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벌이는 가운데 미 정부가 한수원 수출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이다. 5일 정부...



-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뺨겨먹'... 한국일보 PICK 2023.04.06. 네이버뉴스
- K원전도 제동 걸리나...체코 수출 앞두고 ... 중앙일보 2023.04.06. 네이버뉴스
- 미국 정부, 한수원 원전 체코 수출 제동 ... 국민일보 2023.04.06. 네이버뉴스
- 외교부, '美, 한수원 체코 원전 수출 제동' 관... 뉴스1 2023.04.06. 네이버뉴스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26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윤석열 1년

- 달라진 것 없다.
 - 신규원전 계획 없다.
 - 계속운전 신청지연에 따른 원전6기 정지도 대책없다.
 - 사용후핵연료 해결될 것 같지 않다.
 - 수출은 속제만 늘었다.
- 재생에너지 건설계획
 - 줄지 않았다. 먼 미래 물량은 줄이고 근년 물량은 그대로
 - RE100으로 탈원전 정책승계
 - 탈원전에 앞장섰던 산업부도 그대로
 - 전남과 제주에도 증설, 이번엔 과도하게 많은 것에 대한 대책연구소
- 한전적자
 - 그대로 재생에너지 증설한다.
 - 그래도 한전대학 키운다.
 - 적자 갠아줘야 하나?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27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우리의 과제

- 에너지 정책의 정상화
 - 안전과 깨끗 → 에너지 안보, 경제성
 - 재생에너지 대세론 재검토
 - 에너지 정책에 정치의 불개입
- 가짜뉴스와 선동
 - 원전의 위험성 부각
 - 국민의 판단 흐리기
- 건설 생태계
 - 부품 생태계
 - 부지
- 기후변화 대응과 수출
 - 한전적자
 - 정부 실적 서두름

<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 토론회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국회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 2023. 5. 4(목), 16:00

28

Department of Nuclear Engineering
Kyung Hee University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발제 2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양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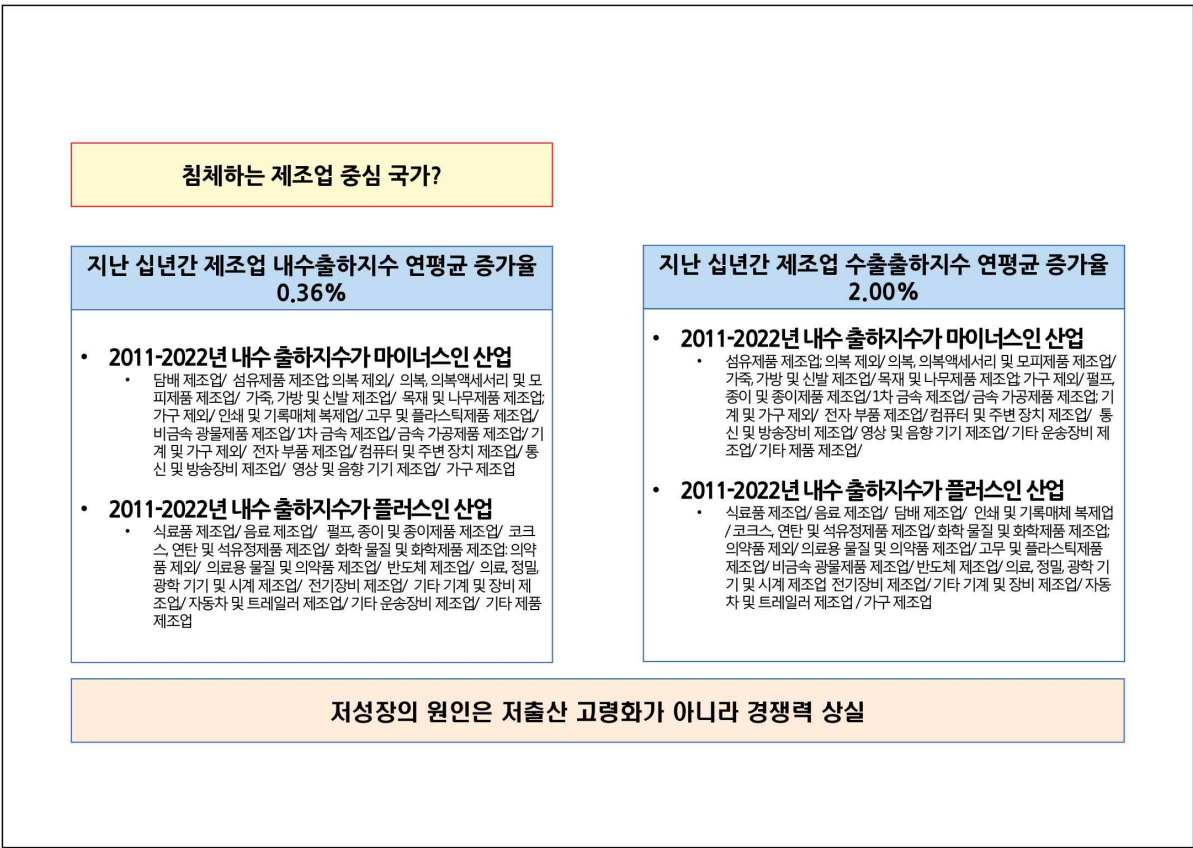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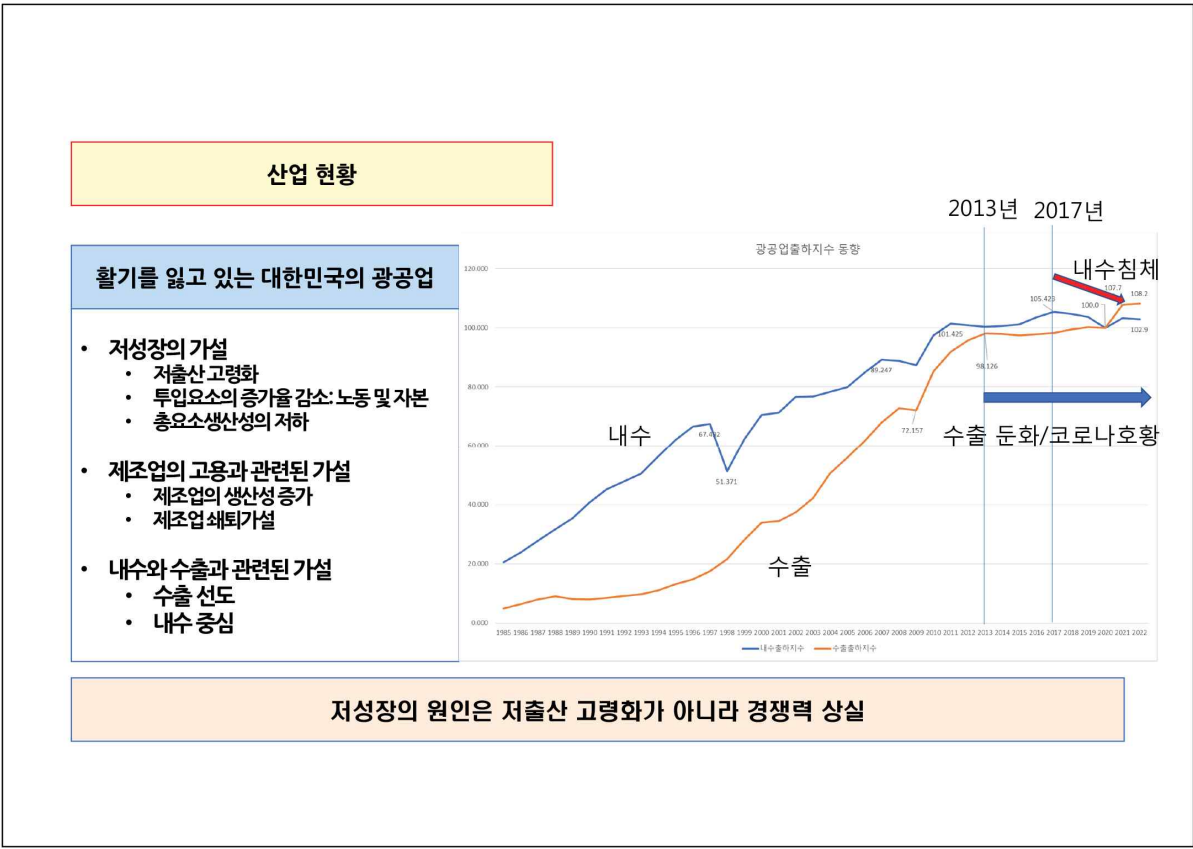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제2 발제 : 글로벌 시장에서의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 일시 : 2023년 5월 4일 (목) 오후 4시
- 장소 :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 주최 : 이인선 의원실, 윤창현 의원실
- 주관 : 바른사회시민회의

산업 현황



산업별 내수출하지수 현황 1

시점	2001-2010	2011-2020	2001-2022	2011-2022	2017-2022
내수출하지수 총지수	3.28%	0.26%	1.73%	0.46%	-0.09%
내수출하지수 제조업	3.11%	0.18%	1.60%	0.36%	-0.28%
식료품 제조업	1.39%	1.30%	1.26%	1.15%	0.94%
음료 제조업	1.21%	1.24%	1.55%	1.83%	1.35%
담배 제조업	-1.56%	-0.55%	-1.30%	-1.09%	-0.6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3.93%	-2.17%	-2.85%	-1.93%	-3.0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3.45%	-2.60%	0.20%	-2.43%	-3.5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6.77%	-8.62%	-7.06%	-7.30%	-11.80%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0.58%	-2.49%	-2.07%	-3.30%	-5.42%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92%	0.26%	1.09%	0.41%	0.39%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72%	-2.28%	-1.47%	-2.10%	-1.55%
코르크,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1.91%	1.12%	-0.32%	1.02%	-0.19%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2.44%	1.98%	1.91%	1.48%	-0.65%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7.83%	3.45%	5.90%	4.31%	6.17%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3.25%	-0.31%	1.41%	-0.10%	-1.66%

제조업의 내수출하지수는 하락하고 있다.

산업별 내수출하지수 현황 2

시점	2001-2010	2011-2020	2001-2022	2011-2022	2017-2022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1.21%	-0.42%	0.25%	-0.55%	-2.59%
1차 금속 제조업	1.86%	-0.47%	0.63%	-0.38%	-1.16%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1.57%	-1.02%	-0.07%	-1.42%	-4.07%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9.93%	-4.46%	2.12%	-3.97%	-5.02%
반도체 제조업	17.02%	11.18%	12.42%	8.72%	1.08%
전자 부품 제조업	16.53%	-7.46%	3.91%	-5.56%	-3.79%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4.13%	-7.02%	-4.97%	-5.67%	-0.10%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2.34%	-7.13%	-2.51%	-6.38%	-8.32%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11.96%	-13.11%	-4.73%	-16.72%	-24.19%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2.56%	2.63%	3.22%	3.78%	7.19%
전기장비 제조업	2.56%	0.90%	1.73%	1.05%	2.00%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6.09%	-0.07%	3.16%	0.78%	2.40%

반도체도 지수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산업별 내수출하지수 현황 3

시점	2001-2010	2011-2020	2001-2022	2011-2022	2017-202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4.91%	1.79%	3.45%	2.25%	1.12%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6.83%	-0.24%	3.67%	1.11%	6.60%
가구 제조업	0.80%	1.18%	0.35%	-0.03%	-1.14%
기타 제품 제조업	-2.32%	2.62%	0.13%	2.22%	1.44%
소계	6.11%	1.36%	3.71%	1.74%	2.2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6.11%	1.34%	3.70%	1.73%	2.23%

자동차도 지수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산업별 수출출하지수 현황 1

시점	2001-2010	2011-2020	2001-2022	2011-2022	2017-2022
수출출하지수 총지수	9.62%	1.61%	5.40%	2.01%	1.69%
수출출하지수 제조업	9.62%	1.60%	5.40%	2.00%	1.67%
식품 제조업	-1.41%	2.65%	0.99%	3.03%	4.21%
음료 제조업	6.29%	4.50%	4.46%	2.96%	-2.16%
담배 제조업	22.96%	6.38%	12.62%	4.67%	2.30%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5.74%	-6.50%	-5.56%	-5.42%	-6.57%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13.05%	-18.04%	-13.94%	-14.67%	-17.48%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7.56%	-1.27%	-5.11%	-3.02%	-11.03%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21.96%	-9.64%	-15.21%	-9.14%	-16.39%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65%	-0.56%	0.30%	-0.82%	-4.03%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0.37%	-2.16%	0.00%	0.31%	1.58%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3.75%	2.45%	2.90%	2.20%	-0.19%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6.22%	2.11%	3.45%	1.19%	0.46%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9.00%	10.44%	9.40%	9.73%	11.89%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2.25%	0.40%	1.70%	1.24%	-0.39%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2.74%	1.54%	2.05%	1.47%	-3.74%

제조업의 수출출하지수는 하락하고 있다.

산업별 수출출하지수 현황 2

시점	2001-2010	2011-2020	2001-2022	2011-2022	2017-2022
1차 금속 제조업	5.64%	0.16%	2.38%	-0.25%	-2.90%
금속 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2.70%	-1.30%	-0.39%	-2.90%	-10.7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15.91%	5.42%	9.93%	5.18%	6.39%
반도체 제조업	23.36%	17.19%	19.49%	16.36%	16.03%
전자 부품 제조업	20.93%	0.55%	7.32%	-2.85%	-7.76%
컴퓨터 및 주변 장치 제조업	-2.69%	-5.18%	-2.77%	-2.84%	-5.49%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11.51%	-14.04%	-0.22%	-9.05%	-0.94%
영상 및 음향 기기 제조업	3.55%	-6.28%	-1.75%	-5.96%	-13.95%
의료, 정밀, 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4.65%	3.30%	4.68%	4.70%	8.07%
전기장비 제조업	8.31%	-0.18%	5.15%	2.58%	5.9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8.76%	1.97%	5.44%	2.75%	3.08%

반도체도 최근 지수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산업별 수출출하지수 현황 3

시점	2001-2010	2011-2020	2001-2022	2011-2022	2017-2022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9.68%	-1.47%	4.50%	0.37%	-1.68%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8.73%	-5.52%	1.59%	-3.99%	-3.32%
가구 제조업	-2.60%	4.90%	-1.10%	0.17%	-10.37%
기타 제품 제조업	-11.15%	-3.26%	-6.23%	-1.91%	-2.39%

자동차도 수출출하지수 증가율이 하락하고 있다!

산업 침체의 원인

중국에 고사당하는 대한민국

수출과 내수 둔화의 원인은 중국

- **2012-2022 대중 수출입**
 - 대중 수출 연평균 증가율: 1.4%
 - 대중 수입 연평균 증가율: 5.4%
 - 2012-2020 대중 수출: -0.1%
 - 2012-2020 대중 수입: 2.6%
- **중간재 수출**
 - 2012-2029년 중간재 연평균 수출증가율 0.73%(-0.35% 메모리 제외시)
 - 2022년 대중 수출의 중간재 비중은 83.6%

2022년 주요국 수출입 현황

(단위: 천불,%)

국가명	2022년				
	수출금액	수출증감률	수입금액	수입증감률	수지
총계	683,584,760	6.1	731,369,657	18.9	-47,784,897
중국	155,789,389	-4.4	154,576,314	11.5	1,213,075
미국	109,765,705	14.5	81,784,723	11.7	27,980,982
베트남	60,963,680	7.5	26,724,717	11.5	34,238,963
일본	30,606,278	1.8	54,711,795	0.1	-24,105,517
홍콩	27,651,186	-26.2	1,877,605	-16.5	25,773,5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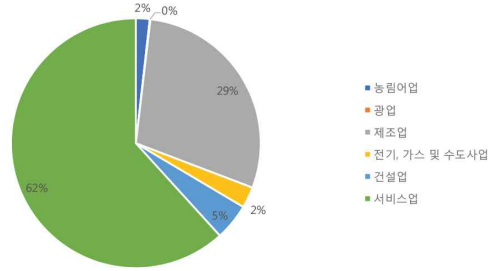
산업의 블랙홀 중국, 관광제재가 중국의 무기?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 만들기

산업 규제 강화

- 환경 규제
 - 플라스틱 퇴출
 - ESG의 고비용구조
- 노동 규제
 - 주52시간
 - 최저임금제
- 산업규제
 -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화학물질 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
- 대기업 규제
 - 경영권 개입
 - 사업 규제: 소상공인 적합업종

산업별 부가가치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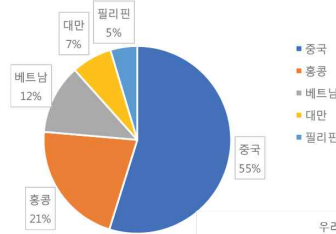
제조업 중심 국가가 제조업 압박 정책

산업 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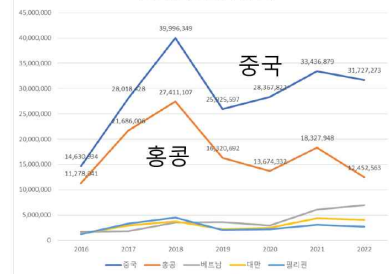
반도체

- 중국과 홍콩에 압도적으로 의존하는 대한민국의 반도체 수출 상황
 - 반도체 관련 생태계가 중국 중심으로 강화되고 있다는 증거
 - 베트남이 부상하고 있으나, 아직은 비중이 12%에 불과
- 반도체 수출이 줄어들면서 기존 산업의 경쟁력 하락 현상이 드러나게 됨.

우리나라의 각국별 반도체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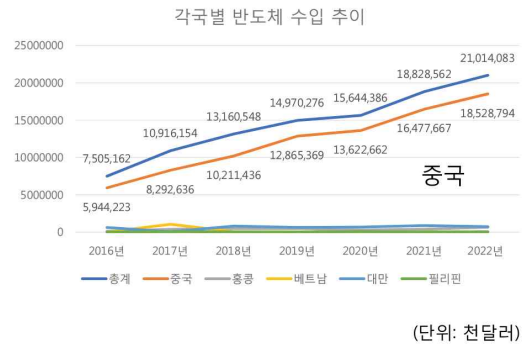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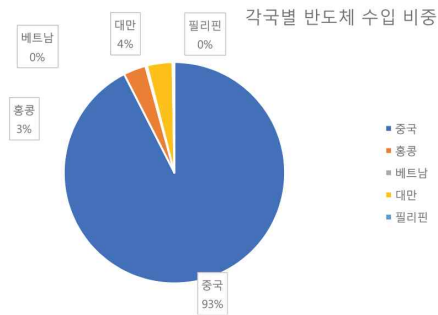
우리나라의 반도체 수출 추이



단위: 천달러

대한민국을 위한 중국은 없다!

산업 위기?



반도체는 중국 중심의 공급망 속에 갇혀 있다!

업종별 GDP 증가율 추이: 서비스 산업은 한계?

	2017	2018	2019	2020	2021 ^P	2022 ^P
제조업	3.7	3.3	1.1	-1.1	6.9	1.4
화학제품	3.4	2.5	-0.9	-0.3	5.7	-3.7
1차금속	2.9	-3.8	-0.9	-3.3	5.6	-5.7
금속제품	-0.3	-1.3	-1.8	-6.3	-3.5	-4.0
컴퓨터, 전자 및 광학	4.8	11.4	6.4	5.2	12.9	7.9
기계 및 장비	22.5	0.7	-0.9	1.0	11.2	1.6
운송장비	-8.1	-2.3	1.9	-10.1	5.4	9.2

자료: 한국은행

	2017	2018	2019	2020	2021 ^P	2022 ^P
서비스업	2.6	3.8	3.4	-0.8	3.8	4.2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1.8	2.9	3.5	-5.6	3.4	6.8
운수업	2.7	3.7	1.7	-17.3	5.3	9.2
금융 및 보험업	4.2	5.6	3.4	9.6	6.7	2.4
사업서비스	2.0	3.8	2.6	0.1	2.8	2.5
의료, 보건 및 사회복지	6.4	8.2	9.8	1.1	5.2	6.2

자료: 한국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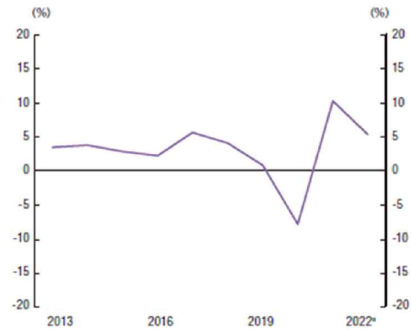
2022년 서비스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고물가로 경기둔화!

품목별 수출 동향: IT 강국의 한계?

	2021		2022	
	증가율	비중	증가율	비중
IT제품	24.0	<35.3>	2.5	<34.1>
반도체	28.1	<20.2>	1.3	<19.3>
무선통신기기	24.7	<3.0>	-10.4	<2.5>
디스플레이패널	18.9	<3.3>	-1.1	<3.1>
컴퓨터	27.0	<2.6>	7.8	<2.6>
비IT제품	26.7	<64.7>	8.1	<65.9>
화학품	38.1	<14.3>	6.6	<14.3>
자동차	23.8	<10.8>	12.3	<11.4>
석유제품	57.0	<6.0>	63.1	<9.3>
기계류	10.5	<8.9>	0.3	<8.4>
철강	32.9	<8.2>	5.1	<8.1>
총수출*	25.7	[6,444]	6.1	[6,836]

주: 1) [*] 내는 수출금액(억 달러)
 자료: 관세청, 산업동향지원부

세계 교역 신장률



주: 1) 상품 및 서비스 교역 기준
 자료: IMF

2022년 우리나라 제품의 경쟁력의 민낯

복합위기의 전개

무능한 문재인 정권의 무책임한 경제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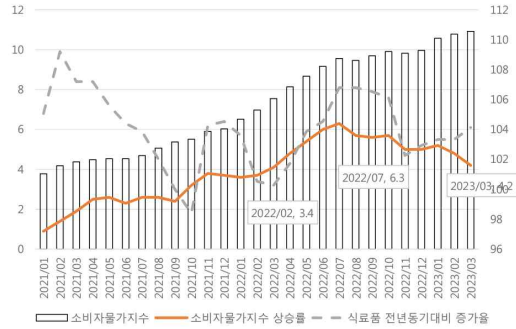
돈을 몰쓰듯 한 문재인 정권

- 국가채무 400조 원 증가
- 총통화 1226조 원 증가
- 저성장: 연평균 경제성장률 2.3%

위기의 경제체제 만든 문재인 정권

- 2022년 기준
 - GDP 대비 민간신용 비율 증가: 225.1%
 - 외환보유고 감소: 4232억 달러

고물가



자본시장의 버블 형성과 고물가

외부충격 1

돈을 몰쓰듯 한 문재인 정권

- 국가채무 400조 원 증가
- 총통화 1226조 원 증가
- 저성장: 연평균 경제성장률 2.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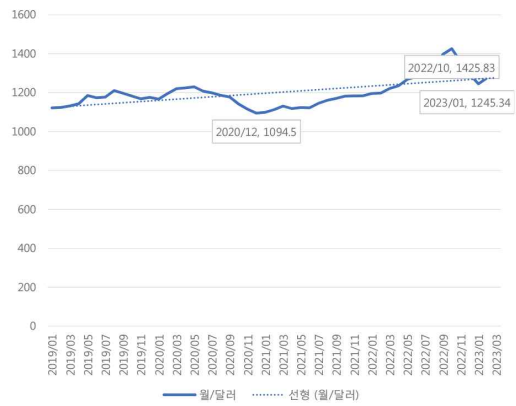
경상수지 축소



유가상승



환율(월/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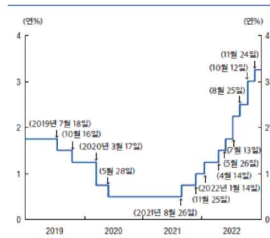
자본시장과 고물가, 교환율

외부충격 2

주요국의 고금리

- 주요국의 고금리 정책과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정책

우리나라의
기준금리
정책



자료: 한국은행

미국과 독일의 국채금리

(자료 기준: %, bp)

	2021		2022		
	3월	6월	9월	12월	
국채금리(10년물)					
(미국)	1.51	2.34	3.01	3.83	3.87
(독일)	-0.18	0.55	1.34	2.11	2.57
리스크 프리미엄					
(미국 회사채 스프레드) ¹⁾	186	189	236	220	188
(신흥국 CDS 프리미엄) ²⁾	187	228	339	332	239
(신흥국 가산금리) ³⁾	386	368	461	467	375

주: 1) 10년 만기 회사채(Baa등급) 수익률 기준
 2) 18개 신흥국의 CDS 프리미엄을 가중 평균
 3) JP Morgan EMBI+(Emerging Markets Bond Index Plus) 기준
 자료: Bloomberg, JP Morgan, Markit

고물가와 고금리

우리 경제의 반응 1

자산 시장의 정상화?

- 자산시장의 정상화 과정과 이에 과정에서 나오는 여진
 - 부동산PF 위험
 - 연체율 증가와 부실채권 증가
- 세계 무역의 둔화로 인한 저성장 국면 지속
- 물가상승 지속과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
 - 유가상승 및 전쟁 지속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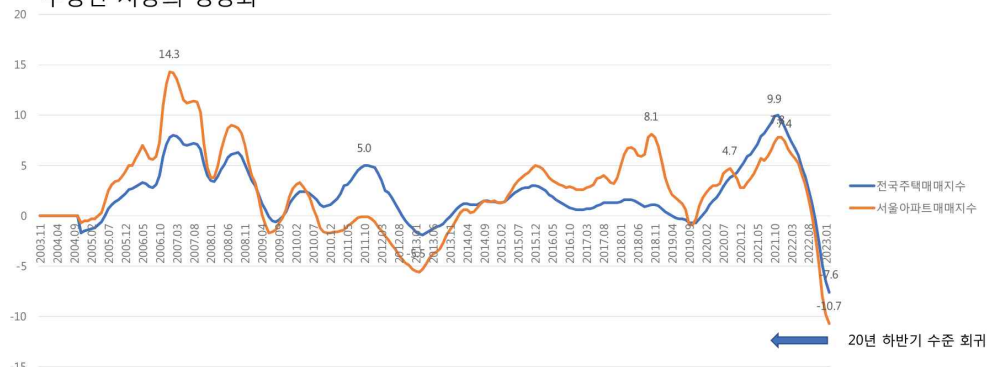
주식시장



복합위기 해결 과정의 하방 위험 대비!

우리경제의 반응 2

부동산 시장의 정상화



복합위기 해결 과정의 하방 위험 대비!

복합위기와 공급망 전쟁

공급망 재편 과정의 부작용

미중 무역 전쟁의 전개

- **트럼프와 시진핑의 대결**
 - 시진핑의 승리: 트럼프 재선을 막은 공헌
- **코로나19와 미국**
 - 미국의 자부심에 상처
 - 미국의 공급망의 불안정성 인식
- **바이든의 대중정책**
 -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국제주의
 - 사우디아라비아: 가치외교와 충돌
 - 트럼프의 어젠다 계승
 - 환경정책의 전환

대두생산지	2016년 대선		2021년 대선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민주당: 조 바이든
아이오와	51.2%		53.1%	
일리노이		55.4%		57.5%
네브래스카	58.7%		58.7%	
미네소타		46.4%		52.6%
인디애나	56.5%		57.1%	
오하이오	51.3%		53.3%	
노스다코타	63.0%		65.1%	
미시간	47.3%			50.6%
캔자스	56.2%		56.2%	

복합위기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길어질 수도!

공급망 재편 과정의 부작용

바이든 행정부의 혼란스런 대응

- **바이든의 환경주의**
 - 유가 상승
 - 사우디아라비아에 대한 의존도 상승
 - 대중국 의존도 강화
- **바이든의 공급망**
 - 미국 중심주의 계승으로 동맹의 부담 증가
 - 중국에 대한 실효적 제재 수단 부재
- **바이든의 외교정책**
 - 사우디아라비아: 가치외교와 충돌
 - 독일, 프랑스, 인도, 브라질, 사우디아라비아의 친중 가능성
 - 대 러시아 정책의 효율성 논란



세계 경제 동반 둔화

- **스태그플레이션의 가능성**
 - 유가 상승 및 가스 상승 장기화
 - 글로벌 농업 공급망 복구 지연
 - 미국 재정지출 증가와 고금리 장기화
- **바이든의 공급망 구축 장기화**
 - 코발트와 희토류 등 중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구체적 정책 미흡
 - 보조금에 따른 규제 강화로 공급망 투자결정 지연
- **동맹의 부담 증가**
 - 탈러시아 및 탈 중국 비용의 보상 없음.
 - 우크라이나-러시아 충돌 장기화

복합위기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길어질 수도!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망 문제

표 6 기존의 차량용 반도체 업체 현황

업체	개요	내용
NXP	차량용 반도체, IoT, 모바일, 가전 국, 통신장비용 반도체, RF IC, 군기 리 통신망 및 공군-해군용 반도체, MCU 및 마이크로프로세서, 파워 이미터용 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9년 10월 팹리스에서 분사 2015년 이 Freescale 인수 2019년 세계시장의 2% 점유 ADAS, 엔진, 차체, 자율주행, 파워트레인, 차량 간 네트워크 부품 *-1으로 MCU 및 파워 이터와 계열 차량용AP, 인포테인먼트, 기술개발 지원 테슬라, 보드, 도요다, 현대, BMW 등 완성차업체 고객
인피니온	차량용 반도체, 전력반도체, 물레 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전력반도체 1위, 차량용 반도체 2위 고전압 차량용 전력반도체 세계 최고 1999년 자회사에서 반도체사업 분사 2019년 4월 이 사이프레스에 인수 *Power 307 프로세서, 최대 300mm 웨이퍼로 전력반도체 생산 차량용 반도체 매출 비중이 4% 다양한 반도체 분야, 주요 고객은 자동차 분야 고객
르네사스	차량용 MCU, 차량정보용 SOC 시 장, 산업용 MCU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03년 차량차량통신용 인포테인먼트 반도체부품 통합해 발족 2019년 4월 이 반도체 통합 2019년 8월 이 인포테인먼트용 마이크로프로세서 및 전자제어 반도체 개발 2019년 9월 이 인포테인먼트용 개발 강화 차량용 MCU의 25%를 점유, ADAS용 자율주행용SOC 개발 도요다, 혼다, نيسان, 보드, 테슬라와 협력 고객
TI	차량용 MCU, 차량용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71년 1인칭 칩 MCU 개발 아날로그 반도체부터 디지털로 매출 중 차량 반도체 비중 13% 차량용 MCU 및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용 AP 시장에서 강세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디지털 가전용 주원형 반도체, 차 량용 반도체, 전력반도체, 컴퓨터 주변장치용 반도체, SOC 칩	<ul style="list-style-type: none"> 1987년 이탈리아 565아나로그인텔리트로닉스와 프랑스 동산 반도체 사업부가 합병해 발족 매출 중 차량반도체 37%, 아날로그반도체 33%, MCU/디지털칩 30% 점유 파워트레인, 차체, 안전 인포테인먼트 분야 차량반도체 강세 실리콘 카바이드 칩 SOC를 태워진 전자 부품에 공급 보우, 테슬라 등에 차량반도체 공급

출처: 전희수 등(2021)

표 4 업체별 차량용 MCU 점유율 현황

순위	업체	점유율
1	르네사스	30%
2	NXP	26%
3	인피니온	14%
4	사이프레스(인피니온에 인수)	9%
5	TI	7%
6	마이크로칩	7%
7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5%
	기타	2%
	합계	100%

출처: IHS Market/전자신문, "정부, 차량용 반도체 지원화 시동," 2021. 3. 16.

표 5 TSMC의 반도체 용도별 매출 점유율

분야	매출 점유율
스마트폰	51%
고성능 컴퓨팅	31%
사물인터넷(IoT)	7%
데이터통신장비	4%
자동차	3%
기타	4%
합계	100%

출처: Reuters, "TSMC ramps up auto chip production as car makers wrestle with shortages," 2021. 1. 28.[21]

설계



TSMC가 75% 생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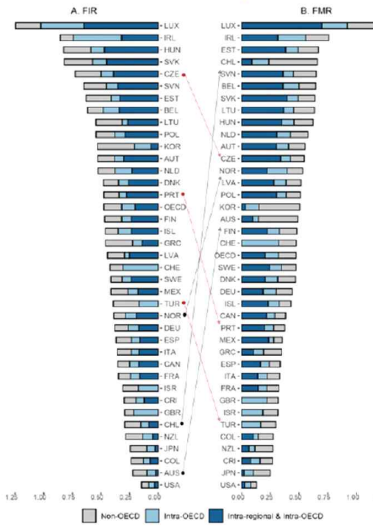
복합위기가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길어질 수도!

공급망 충격에 대한 반응 1

우리나라는 공급망 충격에 취약

- **Foreign Input Reliance Index**
 - 우리나라는 OECD 국가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하게 중간재와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충격에 취약
- **Foreign Market Reliance Index**
 - 우리나라는 OECD 국가나 미국 일본에 비해 현저하게 자국 생산물의 해외 판매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충격에 취약
-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피해야는 우리나라**
 - 미국과 일본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음.

Figure 2. OECD countries account for the major part of foreign dependenci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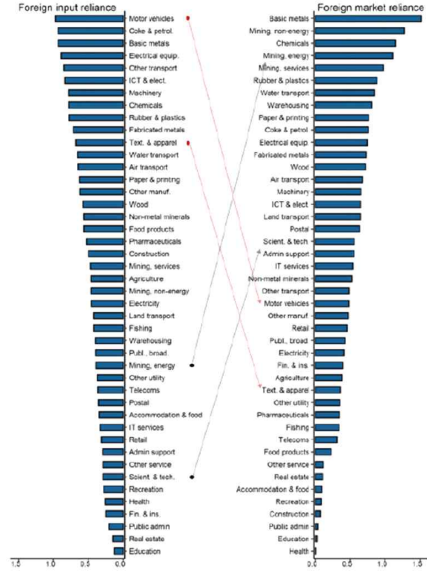
Note: This figure represents the average FIR (panel A) and FMR (panel B) for OECD countries, as well as a simple average for the OECD group. Individual industries j in each country are aggregated through a weighted average, where the weights are gross industry output ($FIR_j = \sum_i (FIR_{i,j} \cdot W_{i,j}^j)$), where $W_{i,j}^j = G_{i,j} / \sum_i G_{i,j}$). A country's FIR/FMR is displayed showing the decomposition of the share of total FIR/FMR between three categories: intra-regional and intra-OECD partners, intra-OECD (extra-regional) partners and non-OECD partners. The regional aggregates taken into consideration are between members of the OECD with intra-regional trade agreements: EEA countries, Asia & Oceania OECD countries and NAFTA's countries (including Chile, Colombia and Costa Rica). The composition of country groups is reported in Table A.A.1. Source: OECD,ICIO database

공급망 충격에 대한 반응 2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도 공급망 충격에 취약

- **Foreign Input Reliance Index**
 - 자동차, 금속, 전자장비, ICT 등 중간재와 원자재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충격에 취약
- **Foreign Market Reliance Index**
 - 금속, 화학, 석유화학, 전자장비, ICT 산업은 해외 판매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망 충격에 취약
-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피해자는 우리나라**
 -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은 공급망 충격에 취약

Figure 3. FIR is typically higher in downstream sectors and FMR in upstream sector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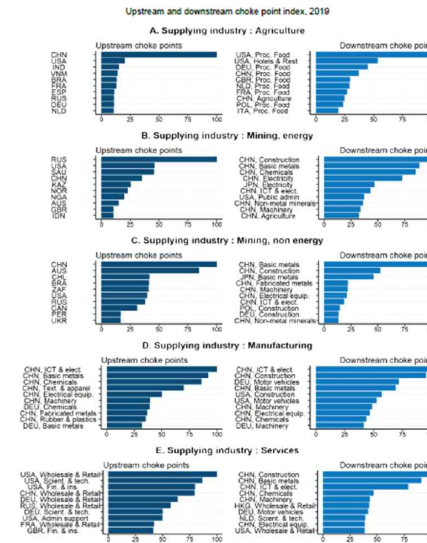
Note: This figure represents the average FIR (panel A) and FMR (panel B) for individual industries. Values are an average of OECD and selected (BRICS) countries (FIR = $\sum_{i=1}^n FIR_{i,j} / n$). The composition of industry groups is reported in Table A A.2. Source: OECD, ICIO database

공급망 충격에 대한 반응 3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공급망 충격을 줄 수 있는 나라

- **분야별 충격 흡수 방안 마련**
 - 농업 등 간 분야에서는 중국 이외의 미국 등 다른 나라와 수입 다변화
 - 제조업 특히 ICT 의존도를 줄일 필요
- **중국을 제어할 수 있는 수단 마련**
 - 중국은 세계적으로 공급망의 핵심 역할을 하는 만큼 국제 사회가 중국이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무역 질서에 따라 호혜적 관계를 유지하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
 - 가치동맹도 하나의 대안.

Figure 5. China is a critical supplier and buyer in most industry groups



Note: This figure plots for each sector the 10 country- or the 10 country-industry pairs with the highest value of the upstream and downstream choke point index. In each panel, the choke point index is normalised to 100 in the industry with the highest value (see Box 2). The coke and refined petroleum products industry (D19) is dropped from the analysis. Source: OECD, ICIO database

위기 극복 방안

산업 경쟁력만이 유일한 해법

국내 산업 정책

- 산업 생태계 혁신
 - 생성, 성장, 진화의 각 단계별 규제 혁신
 - 산업 대전환을 위한 정책 환경 조성
 - 기업 규모별 차별 철폐로 글로벌 기업 양산
- 노동시장 혁신
 - 고급 인력 시장 구축
 - CEO 시장
 - 전문 연구인력에 대한 획기적 보상
 - 노동시장 유연화를 위한 기반 조성
- 자본시장 혁신
 - 글로벌 자본시장과의 연계 강화

대외 통상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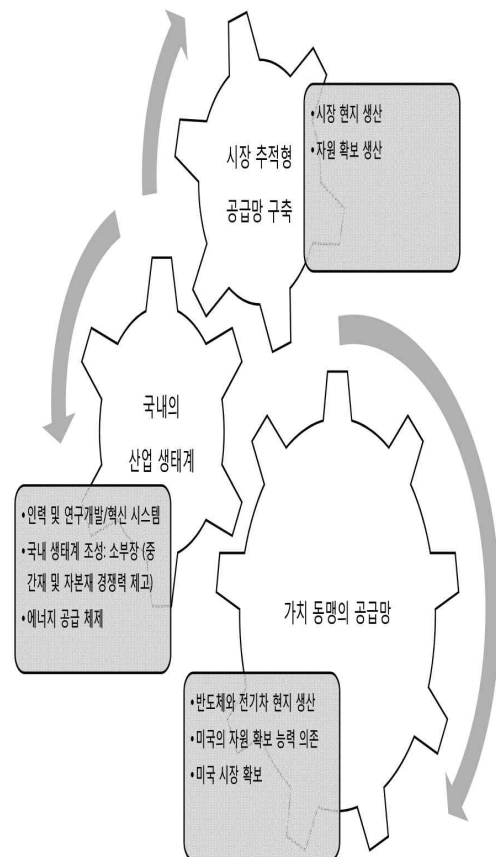
- 가치 동맹 형성으로 안정적 국제질서 확립
 - 중국의 변화를 유도하여 중국이 대한민국을 정당하게 대우하도록 중국의 외교 정책 변화
- 공급망 안정화
 - 미국의 반도체와 청정이동수단에 대한 공급망 참여
 - 중국 이외의 공급망 포트폴리오 구축
 - 중국에 대한 선린외교 강화(동맹과 함께 tit-for-tat)
- 동맹과 함께 하는 자원외교 강화
 - 중동 및 호주와 화석연료
 - 중남미와 아프리카의 자원외교
 - 미국 내 자원확보(농산물, 희토류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산업 대전환

창업, 성장, 진화

- **창업**
 - 국가혁신시스템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
 - 자본시장 연계형 민간주도 CVC
- **성장**
 - 규모 차별 정책 폐기: 조세 및 공정거래 등
 - 미래형 스마트 생산 체제
 - 글로벌 자본시장 접근성 개선
- **진화**
 - 신산업 동력을 찾기 위한 기업의 구조조정 원활화
 - 세금 이연 제도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1년, 성과와 과제〉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토론회

지정토론

조성봉

승실대 경제학과 교수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 전 건국대 교수

황인학

한국기업법연구소 선임연구위원

윤석열 정부 출범 1주년 평가: 산업·에너지 - 토론회 -

2023. 5.

조성봉
송실대학교

산업부문에 대한 토론

- 전반적으로 발제자의 발표 내용에 공감
- 산업부문의 어려움을 돌파하려는 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
 - 노동시장 혁신
 - 노동시장 유연화
 - 자본시장 혁신
 - 글로벌 자본시장과의 연계 강화: 이를 위해서는 금융부문의 자율화와 관치금융의 개선이 핵심 과제
 - 규제개혁
 - 공격적 규제개혁: 그동안 규제개혁은 정부입법 신설규제를 심사하는 '수비'형 규제개혁으로 한계가 있으므로 기존 규제까지 완화·철폐하는 '공격'형 규제개혁 필요
 - 진입규제, 가격규제 및 공기업체제 등 새로운 규제를 지속적으로 파생하는 한국 특유의 덩어리 모(母)규제를 철폐해야
 - (예) 진입규제의 파생규제로서 한전의 판매독점에 따른 재생에너지 직접 PPA 수요자에 대한 전기요금 약관, 가격규제의 파생규제로서 전기요금 규제의 여파로 나타난 SMP 상한제 도입, 공기업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파생규제로서 민간 LNG 직도입사에 대한 비축의무 적용 가능성(자원안보특별법안)
 - 주요 덩어리 규제: 수도권 규제, 노동 규제, 상법의 대주주 규제, 공정거래법의 경제력집중억제 정책

1

에너지부문에 대한 토론

- 에너지 요금 규제에 따른 에너지산업 생태계의 붕괴
 - 에너지산업의 어려움: 한전 적자 32조원, 가스공사 미수금 10조원
 - 전력산업 생태계 붕괴: 발전회사, 전기공사, 건설, 송배전관리 등 전반적인 전력산업 생태계 붕괴 위기. 발전부문의 경우 SMP 상한제를 도입하여 3월까지 민간 2.1조원의 수익 감소.
 - 한전의 회사채 및 은행채 시장에서의 구축(Crowding Out)효과: 하루 한전 채 발행액 1,000억원
 - Rate payer가 내야 할 돈을 Tax payer가 내는 문제점
 - 에너지 수입액의 급증: 2022년 수입액 증가의 68%가 에너지 수입 증가액
- 전력시장의 왜곡
 - 한전의 전력구입비용을 낮추기 위한 제도적 장치: SMP 상한제, 용량요금(CP)의 경직성(14년간 고정), SMP에서 무부하비용 제외 논의, 보조서비스 시장 규모의 제약
 - 반시장적 CBP 시장의 고집
- 상장회사인 한전의 주주권의 침해
 - 전기요금 억제로 한전 주주의 권익을 무단으로 침해
 - 외국인 투자자의 문제제기: SEC 공문

2

에너지부문에 대한 토론(계속)

- 에너지 부문 독립규제기관의 설립
 - 전기 및 가스요금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결정
 - 정치적 포퓰리즘에서 보호
-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탈원전 정책 후유증
 - 탈원전정책이 불러온 LNG발전소 가동 증가와 한전 전력구입비용의 증가
 - 원전 생태계의 붕괴
- 동해안 송전제약의 문제점
 - 백두대간을 건너는 송전선 공사의 지연으로 수도권에 공급되어야 할 동해안 석탄 및 원전 전력의 지체
 -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발전설비의 기피문제와 함께 지역별 전기요금 차등화로 풀어야 할 숙제
- 봄철 태양광 출력조정 및 원자력 출력저감 문제
 - 송전권에 대한 재산권 미설정에 따른 문제점: 전력거래소가 명백한 재산권과 우선권을 정해야 할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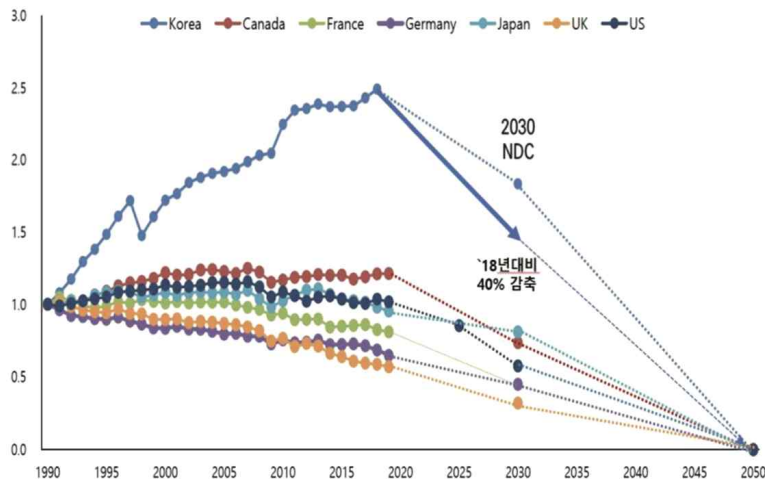
3

에너지부문에 대한 토론(계속)

- 재생에너지 문제
 - RE100의 어려움: 재생에너지 직접 PPA에 대한 한전의 차등요금 약관
 - CF100은 현실적인 대안
 - 한수원의 전력 직판방안
- 기술적 필요 조건
 - 에너지전환을 위한 기술이 확보되어야 할 것
 - 현재까지 입증된 발전 기술: 수력발전, 화력발전, 원자력발전, Gas Turbine
 - 재생에너지 발전 기술의 검증은 아직 끝나지 않아
 - 한국에서 보조금/지원 등을 배제한 자체의 경제성
 - 계통운영을 위한 간헐성 문제의 극복 미진
 - ESS 등 전력저장 장치의 기술적 한계 및 불안정성
 - 기계공학 및 에너지공학: 고전적 물리법칙의 대상
 - 엄청난 질량, 중력, 화학적 변화를 감당해야
 - '시간이 지나면 기술이 개발될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 ↔ 자동차, 비행기, 로켓 등 기계공학 기술진보는 제한적
 - AI, 컴퓨터, 인터넷 등에서 보는 IT 기술진보 또는 18개월 및 12개월마다 이뤄진다는 '무어의 법칙'이나 '황의 법칙'이 적용되는 반도체 기술의 진보는 에너지분야에 적용되지 않음.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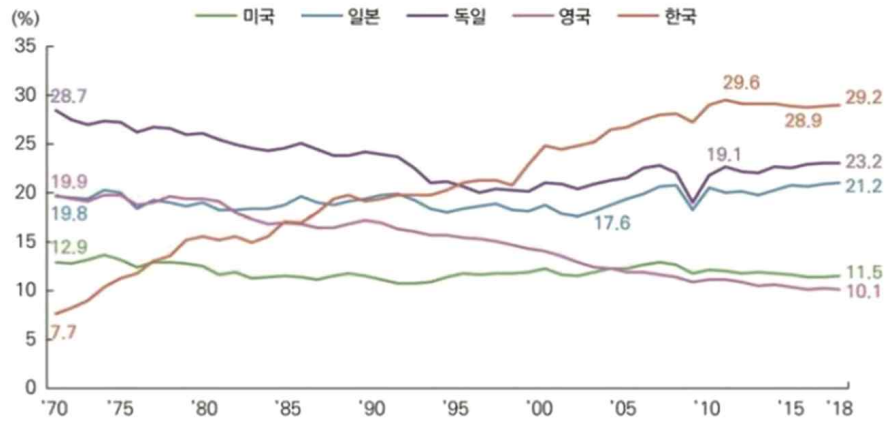
< 주요국 탄소중립 목표 ('90년배출량=1 기준)>



조흥중(2021. 8), "경제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NDC 목표 설정과 탄소중립", (한국자원경제학회 좌담회) 에서 재인용

5

<주요국의 제조업 GDP 비중 추이>



출처: 국회예산정책처(2020)

조용종(2021. 8), "경제현실을 감안한 합리적 NDC 목표 설정과 탄소중립", (한국자원경제학회 좌담회) 에서 재인용

대한민국 경제위기 극복 대토론회, 2023년 5월 4일(목),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



임재규
에너지경제연구원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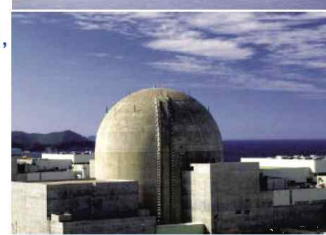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도전의 시대

❖ 탄소중립의 글로벌 규범화와 글로벌 에너지공급망 불안 공존

- '30년 NDC 목표 달성 및 탄소중립 비전 달성을 위해 전세계 주요국들은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체제로 전환
- 에너지의 무기화 전략 확산 → 글로벌 에너지 공급 위기 및 가격 변동성 확대 → 에너지 수급 안정의 중요성 강조
- 탄소중립과 에너지 안보의 조화를 위해, 에너지 소비, 공급, 전달체계, 산업 등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혁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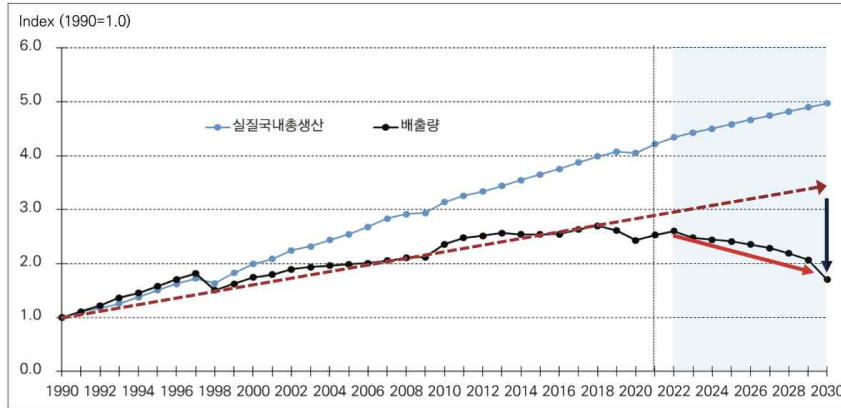
❖ 주요국들은 탄소중립 구현과 에너지안보 강화의 조화를 위해 에너지정책 재설계 및 체제 개편 중

- 탄소중립 기조 하에 에너지 자급률 개선을 위한 원자력, 재생E, 수소 등 에너지원의 중장기적 역할 재조명
- 국가별 여건에 따라 에너지효율 제고, 원자력 역할 확대, 재생E 보급 확대 등 적극적 에너지정책 추진으로 새로운 기회 창출 노력
- 탄소중립형 경제성장 + 혁신기술의 개발 및 상용화 + 정부지원



2

'30년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실질적인 구조적 혁신은 가능한가?



- ❖ '30년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배출량을 최대한 빨리 지속적인 감소세로 전환 필수
- ❖ 제조업(에너지다소비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화석연료 중심의 전력공급 등 구조적 취약성 극복 관건
- ❖ 향후 8년 동안 실질적인 혁신이 가능한가? 기존 에너지시스템의 혁신 방향은?
- ❖ 구조적 혁신이 동반되지 않은 온실가스 감축은 상당한 규모의 경제적 비용 유발!!
 - '23년~'30년 연평균 경제성장률 1.7% → 1.4~1.5% (CGE모형을 활용한 비공식 분석결과, 인용 불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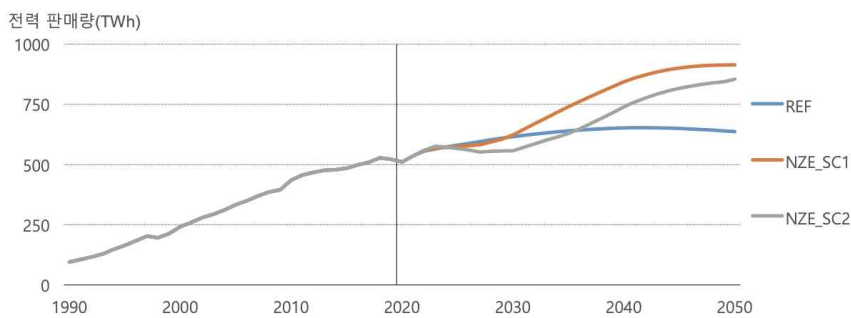
3

향후 전력수요 증가에 대비한 전략적 접근 필요!

- ❖ 제10차 전기본 등에서 예측한 전력수요보다 높은 전력수요 증가세 가능성 반영 필요

• 판매량: ('18) 527.9 TWh → ('30) 558~624 TWh → ('50) 855~915 TWh
 (607~678) (929~995) ← 발전량

※ CCUS, 그린수소 생산에 소요되는 전력수요 미반영 ※ 제10차 전기본(2023.3)의 '30년 전력수요(목표): 572.8 TWh



※ 비공식 분석결과로서, 수치 인용 또는 활용 불가

- ❖ 최종에너지 소비의 전력화는 직접 배출량 감축 효과가 있으나, 에너지수급에 부담 초래

4

특정 에너지를 배제하는 에너지믹스 정책은 부적절

- ❖ 가용자원을 최대한 활용해도 부족한 상황 발생 가능성 농후
 - 실현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반영해, 재생E, 원자력, 그린수소 등의 역할 조정
 - 무탄소 전원인 재생E와 원전의 향후 국내 역할 확대 여건을 체계적으로 반영한 조화로운 전원믹스 구성 전략
 - 화석연료 발전의 합리적 축소 & 최종에너지소비 전력화를 반영한 전원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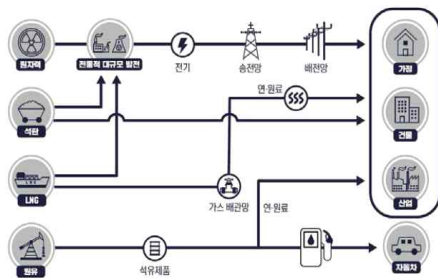
- ❖ 에너지안보와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E와 원전의 조화로운 동행
 - 재생E가 탄소중립 시대의 주력전원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보급의 편중성, 주민수용성, 산업경쟁력, 법제도 등 다양한 문제점 극복 관건
 - 탄소중립과 에너지안보를 위한 원자력은 불가피한 선택지
 - 향후 기저부하용 석탄발전 대체, 전력시스템의 안정화 등을 위한 원전의 역할에 주목
 -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보 등에 대한 전제조건 해결 필수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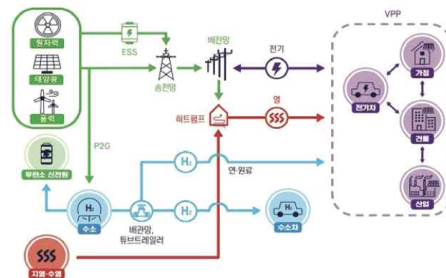
에너지·경제안보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에너지·기후정책

- ❖ 외부충격을 견뎌낼 수 있는 강건한(Robust) 에너지시스템으로 재설계(Re-Design)
 - 해외의존형 에너지공급체계 및 산업구조의 한계 극복 관건
 - 온실가스 감축비용은 향후 산업·국가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요소 → 국가경제와 에너지시스템 전반에 영향 유발
 - 에너지(전력) 효율 제고와 소비의 탈탄소화를 위해 에너지 수요관리 최우선 강화
 - 에너지·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정부의 역할 중요 → 정치와 이념에서 과감한 독립

【전통에너지 기반 단방향·중앙집중형 시스템】



【무탄소에너지 기반 양방향·분산형 시스템】



6

에너지·경제안보를 체계적으로 반영한 에너지·기후정책 필요



❖ 에너지-기후통상-산업의 체계적으로 연계한 미래지향적 접근 및 논의 필요

- 자국의 경제안보, 에너지안보 등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는 주요 선진국들 주시
- 급변하는 글로벌 기후통상 여건과 국내·외 에너지정책은 향후 국내 산업계의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에 지대한 영향 → 경제·에너지 안보를 보다 체계적으로 반영한 에너지·기후정책 필요
- 기후통상 여건의 변화(CBAM, RE100, ESG 등)는 특정 분야 및 업종이 아닌 국가경제 및 산업 전반에 걸쳐 파급효과를 유발하는 잠재력 내포

[토론문]

'경제는 심리다' -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박 인 환(전 건국대 교수)

1. 각종 경제지표의 악화 : 물가, 금리, 부채, 환율, 수출, 고용

- 0 국내 산업의 생산과 투자가 줄면서 지난해 말부터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高' 격랑에 이어 국가, 기업, 가계의 부채 증가, 실업률 증가 등 '다중高' 격랑이 밀려드는 등 한국 경제의 위기 징후
- 0 최근 세계 산업계가 맞이하고 있는 새로운 경제의 대전환, '그레이트 시프트 (Great Shift)' 시대의 불안
- 0 '경제는 심리다' 실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제심리

2.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기업과 소비자)

- 0 경제활동과 경기변동을 심리적으로 파악하는 경제심리는 민간 경제주체인 기업과 소비자가 경제 상황에 대해 생각하는 전반적인 심리상태
- 0 생산, 투자, 고용 등에 대한 의도나 판단이 반영되는 기업 경제심리
소득과 저축 및 소비 등에 대한 판단이 반영되는 소비자 경제심리

3. 경제심리지수(ESI, Economic Sentiment Index)

- 0 '경제심리지수(ESI)'는 경제주체인 기업의 경제심리와 소비자의 경제심리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합 지수(경기전망지수)

- 0 경제주체의 심리를 통해 경제활동과 경기변동을 파악하는 경제심리지수는 기업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기업경기실사지수(BSI, Business Survey Index) 소비자의 경제심리를 나타내는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urvey Index)를 통합해서 만든 지표
- 0 한국은행은 2012년 6월부터 매월 말 ESI를 조사하여 발표(2003년 1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ESI의 평균을 100으로 해서 이를 기준으로 계산)
- 0 특정 시기의 ESI가 100을 넘으면 민간 기업과 소비자의 경제심리가 과거보다 좋아서 앞으로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는 의미, 100을 밑돌면 과거보다 못할 것이라는 의미

4. 최근 경제심리지수(ESI), 기업경기실사지수(BSI)의 변동 추이

(1) 경제심리지수 : 2021년 11월(106.9)부터 지속적 하강 상태 유지

- * 지난해 말부터 발표된 경제심리지수(순환변동치) 추이
2022년 10월 95.8 / 11월 94.3 / 12월 93.0로 하강하다가
2023년에도 1월 91.9 / 2월 90.8 / 3월 89.8로 하강상태 유지

(2) 기업경기실사지수(BSI)

- 0 경제심리지수 측정의 주요 기반이 되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소비자동향지수보다 더 경제성장률, 설비투자증가율, 수출증가율 등 주요 거시지표 간 상호 밀접한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분석(전경련의 분석 결과)
- 0 기업의 경기심리가 바로 기업의 생산·투자 등의 의사결정을 통해 실물경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의미

(3) 기업경기실사지수의 추이 : 경기전망 부진의 장기화

- 0 세계경제 불황과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의 여파로 우리 기업들의 경기전망 부진 장기화

- 0 중국 경제의 개방과 실내 마스크 착용의무 해제 등으로 어느 정도 개선 기대감도 있지만 수출과 내수 동반부진 상황을 뒤집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
- 0 한국은행이 2023. 1. 27. 발표한 '2023년 1월 기업경기실사지수(BSI)'에 따르면 새해 첫 달부터 전체 산업의 BSI는 전월보다 5점 하락한 69 기록
 - * 지난해 9월부터 5개월째 BSI 하락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차 유행기인 2020년 9월(64) 이후 28개월 만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
- 0 대한상의회가 2023. 3. 28. 전국 2257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기업경기전망 지수(BSI)를 보면, 2분기 전망치도 94에 불과
- 0 전경련이 매출액 기준 6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4월 BSI 전망치는 더 하락한 93에 불과(전경련 BSI 전망치가 기준치 100을 하회한 건 지난해 4월(99.1)부터 13개월 연속으로 2021년 2월 이후 최장기 기록)

(4) 국내 기업의 경영환경 악화 요인

- 0 최근 동아일보에서 2023년 현재 국내 경영학자 151명을 상대로 '국내 대기업의 경영 환경 중 가장 어려움이 큰 부문'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복수응답)
- 0 경영학자들은 국내 대기업의 경영 환경 중 가장 큰 어려움으로 '불안한 노사관계'(32.5%)를 첫손가락에 꼽았음
 - * 글로벌 경기 침체, 미중 갈등 불확실성, 공급망 불안보다 노사관계 불안
- 0 또한 '신시장 및 신사업 발굴'(50.7%), '과감한 투자를 통한 경쟁력 확보'(38.0%) 등 국내 대기업의 핵심적 과제 수행의 장애물로서 바깥의 견제가 아닌 대기업 내부 요인을 지적
- 0 '위의 과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에 관한 질문에는 '노조의 무분별한 발목 잡기'(23.8%)가 1위이고, '기업 내부 리더들의 역량'(19.2%)이 2위, '임직원들의 혁신 노력 부족'(16.6%)이 3위로 지목

- 0 위 조사결과에 의하면, 절반 이상의 경영학자들이 정치권이나 글로벌 경쟁사의 견제, 정부 규제 등 외부 요인이 아닌 기업 내적인 요인에 더 주목
- 0 결국 우리 실물경제의 회복은 경제주체의 심리 그 중에서도 기업경제심리, 기업 경기실사지수(BSI)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임
- 0 저하된 기업경기실사지수의 제고를 위해서는 기업 경영에 대한 각종 규제의 완화 (규제개혁)와 노동개혁 등으로 기업경영에 활력 부여가 중요

5. 기업 경제심리에 악영향을 미치는 법제의 개혁

(1)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

- 0 문재인 정권 당시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등의 주도로 졸속으로 제정되고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부터 형벌 구성요건 규정의 명확성이나 구체성, 완결성에 많은 문제 노출
- 0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과 별개로 신설되어 산업재해,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의 의미 등 상호 개념 범위가 중첩되고, 처벌 범위도 중첩되는 모순과 함께 근로자와 사업주를 ‘적대적으로 갈라치기’ 하는 악법
- 0 일반 재해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규정하고 있는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산업재해를 규제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에 대한 재(再) 특별법으로 특별산업재해를 더욱 강하게 규제하는 법을 만든 것은 문 정권 당시 만연한 법률만능주의 사조에 따른 전형적 과잉 입법
- 0 더구나 민노총 등 급진적 노동자 집단의 눈치를 보면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 대한 과도한 의무를 부담시키고 특히 중소기업의 산업 안전 및 보건비용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정치적 포퓰리즘’ 입법
- 0 나아가서 중대재해에 대해서만 따로 엄격한 형벌과 함께 징벌적 배상으로 중복처벌금지와 과잉금지의 원칙,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되므로 위헌성 내재

0 무엇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규제 법률로서 기존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형법 등 각종 산업재해에 대한 형사적 규제가 완비되어 있는 현실에서 기업주에 대한 과잉 처벌로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나치게 제한하므로 폐지하는 것이 마땅함

(2)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의 시행

0 문재인 정권 당시 특정한 경제범죄 관련 기업인에 대한 취업제한 대상 기업을 확대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 시행령 개정

0 앞으로는 특정한 경제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가 비록 해당 기업체의 창업주이거나 전문 경영인일지라도 자신의 기업체에 임직원 등으로 경영 일선에 복귀할 수 없게 됨

0 더구나 취업금지 기간에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 임직원으로 복귀하는 등 취업한 자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해임을 요구할 수 있고, 승인 없이 취업한 자와 해임 요구에 불응한 기업체의 장은 따로 형사처벌을 받게 됨

0 특히 기업인의 취업 제한을 종전보다 강화한 조치는, 사실상 재벌 총수 일가가 자신들의 기업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겨냥한 것으로 입법 '파퓰리즘'의 전형적인 형태로 보임

0 결국 범죄를 저지른 재벌 총수 일가가 회사에 남아서는 안 된다는 명분으로 문정권의 지지 세력인 좌파 단체의 '대기업 혐오' 및 '반(反)기업 정서'가 반영된 것으로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신속히 개정하는 것이 마땅함

(3) 지나치게 과도한 상속세의 문제점 : 자본이득세로 전환

0 최근 고(故) 김정주 넥슨 창업자가 남긴 10조원대의 유산에 대해서, 그 상속인인 아내와 두 딸이 국세청에 6조원대 상속세를 신고하고, 향후 10년에 걸쳐 주식 담보대출과 배당금 등을 동원해서 세금을 나눠 내기로 함

- 0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유족들도 삼성전자 주식 등을 팔아 12조원 규모의 상속세를 내기 시작했으며, LG그룹 일가는 9000억원, 롯데그룹 일가도 3000억원 가량의 상속세를 나눠 내고 있음
- 0 이러한 과도한 상속세 부과에 대하여, 세금은 이익이 생겼을 때 내는 것으로 현행 상속세를 폐지하고 자본이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
[상속세의 부과는 기업인이 주식을 상속받을 때가 아니라 기업이 해당 주식을 매각해서 가처분소득(이익)을 창출할 때 과세해야 한다는 원칙]
- 0 상속세법은 사실상 '기업의 경영권상속 금지법'으로 기업 상속의 경우 최고 세율 50%에서 경영권 프리미엄(경영권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가 더해져 최대 65%까지 상속세를 내게 된다면 이는 결국 기업 경영권의 상실로 이어짐
 - *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감안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가 상속세 최고세율이 65%로 가장 높음
- 0 상속인이 기업 경영권을 상속받았다는 이유로 할증과세해서 그 경영권을 잃게 하는 것은 재산권의 본질을 침해하게 되어 있어 우리나라 상속법은 실질적으로 '경영권상속금지법'에 해당하므로 위헌성이 높음
- 0 주요 외국의 경우 상속세를 점진적으로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향이고, 기업 상속 시에는 경영권을 보장하는 장치를 두고 있으며 경영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상속세를 부과하는 나라는 이제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함
- 0 그 부작용으로, 기업주가 주가상승으로 인한 상속세 과중을 막기 위해서 투자에 소극적인 자세와 함께 주가를 낮게 유지하려는 경향으로 상장 기업들의 주가가 실적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이 만연함
- 0 결국 국부의 해외유출을 방지하고 기업승계 활성화로 인한 기업투자 활성화로 주가 상승을 견인하여 세수가 증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부가 증가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현저하게 낮추는 것이 타당함

(4) 노란봉투법의 입법 강행

- 0 최근 더불어민주당 등 절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들이 발의하여 입법을 강행하고 있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속칭 노란봉투법)은 위헌적인 악법이며, 정치적 타산에 의한 입법권 남용으로 ‘입법 포퓰리즘’에 해당
- 0 노란봉투법은 불법 단체교섭·쟁의행위로 인해 사용자의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폭력이나 파괴행위가 없는 한 노조나 근로자 측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 0 나아가서 노조나 근로자의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손해가 있더라도, 사용자의 영업손실, 제3자에 대한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 등 간접손해에 관하여는 노조나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 면책
- 0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직접손해조차도 그것이 노조에 의해 계획된 경우에는, 노조 이외에 노조의 임원이나 조합원 등 근로자의 손해배상책임은 면책
- 0 노조나 근로자의 폭력·파괴행위로 인한 직접손해가 발생하여 사용자가 노조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묻게 되더라도, 노조의 존립이 불가능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면책 또는 배상액 감면
- 0 또한 ‘노동쟁의’의 개념을 현행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 뿐만 아니라, 그 밖의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의 관계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한 분쟁’으로 확장함으로써 ‘근로조건의 향상’만을 위하여 노동 3권을 허용한 헌법 규정에 위반(헌법 제33조 제1항)
- 0 현행 노동법은 국제적인 상식과 기준에 의하여, 노동쟁의에 있어서 민주적 방식을 요구하고 있음(폭력·파괴행위와 물론 조업 기타 정상적인 업무를 방해하는 방법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주체·목적·방법·절차 요건 준수)
- 0 노동쟁의 과정에서 불법적 폭력행위나 파괴행위는 형사책임의 대상인데 그 민사책임을 면제한다는 것은 ‘불법의 합법화’를 도모하는 입법적 모순

- 0 불법 노동쟁의를 조장하고 노조의 폭력·파괴행위조차 면책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기득권에 해당하는 민노총을 과잉보호하고 이로 인하여 선량한 노조와 근로자를 모두 무법자로 만드는 위헌적 입법은 중단되어야 함
- 0 민노총의 소수노조, 조합원, 비조합원, 자영업자(택배사업자 등)에 대한 횡포는 거의 '조폭' 수준에 해당하므로 미국과 같이 노조의 부당노동행위를 금지하는 등 민노총이 노동약자들에 균림하여 피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모색(勞勞 관계에서 노동정의 회복)

(5)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추진

- 0 사회적 경제는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의미
- 0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 드러나는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 주거, 육아, 교육 등 인간 생애와 관련된 영역에서 경쟁과 이윤을 넘어 상생과 나눔의 삶의 방식을 실현하려고 함(사회적 경제조직에는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등이 있음)
- 0 현재 '사회적 기업'은 2007년 노무현 정부 당시 제정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라 정부 지원, 세금 감면 등 다양한 지원과 혜택을 받고 있으며,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10여 년 동안 필요 이상으로 비대화함
- 0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대통령 산하에 사회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하여 사회적 경제조직에 국유재산을 무상임대하고 교육·훈련 지원 등 자금을 지원하며, 공공기관의 재화·서비스 구매액의 5%~10%를 우선 할당(10% 적용 시 연간 최대 7조 원의 판로 보장)
- 0 민주당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을 GDP의 3% 이내로 제한하는 정부 여당의 '재정준칙' 입법 선결 조건으로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처리를 요구하지만, 재정준칙은 국가부채를 규율하는 게 목적인데 반하여 법안이 통과되면 오히려 각종 정부 보조금 청구와 지급이 급증하게 되고 재정 건전성이 훼손될 것임

- 0 또한 민주당은 핵심 광물 등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현재 정부 여당이 추진 중인 ‘공급망안전법’의 처리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입법을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음
- 0 무엇보다 현재 사회적 경제조직 관련 인사 다수가 운동권, 좌파 성향이라는 점에서 법안 자체가 ‘운동권 퍼주기법’이며, 일반 중소기업에 대한 역차별로 보조금에 의지하는 좀비기업이 넘쳐날 수 있다는 점에서 ‘좀비기업 육성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움

(6) 보험업법 개정 추진(삼성생명법) : 삼성 해체법

- 0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주도하는 이른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 총 자산의 3%까지 계열사 주식을 ‘취득 원가’로 보유할 수 있는 현행 법 규정을 ‘현재 시가’로 변경하는 것이 주요 내용임
- 0 삼성생명법은 과거 2020년 6월에도 박용진 의원 등 10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발의 후 2년 5개월이 지난 시점인 2020년 11월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에 상정되면서 논란이 확산됨
- 0 개정안에는 보험업법 중 ‘보험사는 총자산의 3%가 넘는 계열사 주식을 보유할 수 없도록 한 규정’이 있는데 그 주식의 평가 방법이 논란의 핵심으로 현재 여기에 해당하는 보험사는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뿐이어서 삼성그룹을 대상을 한 일명 ‘삼성생명법’이라고 할 수 있음
- 0 문제는 삼성생명이 보험사로서 총자산의 3%가 넘는 지분을 팔 경우 삼성그룹 입장에서는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가 무너지면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순환 지배구조가 끊어지게 되어서 최악의 경우 삼성은 사실상 주인 없는 회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는 분석임
- 0 결국 민주당의 의도대로 삼성생명법이 개정된다면 삼성전자의 지배구조는 이제 ‘이재용-국민연금-블랙락펀드’의 3자 운영체제가 됨에 따라 결국에는 삼성이 해체되는 것으로 소급입법을 통한 사유재산 침해의 우려가 있음

토론 요지: 산업위기, 원인과 대책

황인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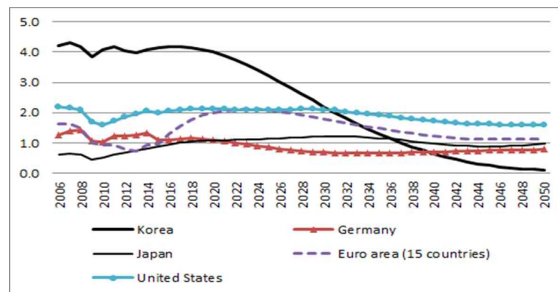
한국기업법연구소 선임연구위원

1) 발제문 요지와 촌평

- 한국경제의 저성장, 한국산업의 위기는 저출산 고령화 때문이 아니라 산업경쟁력의 상실에 기인한다는 양준모 교수님의 발제문의 요지에 공감
- 특히 한국산업의 위기와 기업의 선택지를 구분해서 진단한 것은 적절하며, 해외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국내기업들은 ①G2 갈등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②국내 생산경쟁력·인프라 약화, ③한반도 지정학 리스크 고조 등으로 인해 투자처와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추세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일자리, 국민소득은 GNP가 아니라 GDP가 중요하며, 따라서 해외 투자와 생산 확대는 국내 제조업 공동화, 일자리 부족, 저성장 문제를 심화시킬 것
- 또한 한국의 대표 산업들이 글로벌 downstream 및 upstream 양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하다고 발제문에서 보여주는 통계는 해당 산업의 국내기업들이 국내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전망을 한층 보강해주는 자료이며,
- 이에 한국산업의 위기, 저성장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규제개혁을 비롯한 산업 정책과 경제안보 개념의 무역외교정책이 중요하다는 것에 이견이 없음

2) 원인 분석과 해법 모색에 관해 부연하면,

- ① 위기의 경고음과 하인리히 법칙 : ‘위기는 하루 아침에 오지 않는다.’
 - 10년 전, 2013년 4월 MGI, ‘한국경제 보고서’
‘한국경제는 서서히 끓는 냄비 속 개구리, 이대로 가면 추락할 것’
(아래 그림은 그 당시 조선일보의 삽화)



- 2013년 6월, OECD 장기전망 보고서
‘OECD 주요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추락하는 한국경제, 2030년이면 성장 엔진이 멈출 것
- 2016년 6월, ‘고야의 검은 그림, 곤봉결투를 보며’



“한국경제가 위중하다는 진단은 진작부터 있었다. 2013년 봄 이후 한국경제는 서서히 끓는 솥 안에서 저 죽을 줄 모르고 태연히 앉아 있는 개구리 형상으로 비유되기도 했다. 성장률이 3%에도 이르지 못하고 경제가 계속해서 부진한 것은 경기순환 과정의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이며, 따라서 구조 개혁 없이 전통적인 재정·금융정책만으로는 파국을 막을 수 없다는 진단과 경고도 잇따랐다.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 회생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지고 혁신을 가로막는 경제제도와 불량 규제를 고쳐야 한다는 처방전도 빈번하게 있었다. 그래서 역대 대통령들이 규제개혁을 주창했지만 결과는 어떤가? 규제 총량은 2003년 7,855개에서 2014년 14,987개로 증가했다. 최근만 해도 2014년 7월 이후 국회에서 발의한 규제법안 1,367개를 조사해보니 새로운 규제가 2,643개나 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규제개혁은 정부 한 권에서의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을 뿐, 여의도 정치는 규제를 신설·강화하며 양산하는 일에 열심이었던 것이다.

고야의 그림으로 돌아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두 사내는 먼저 사지에서 벗어나야 했다. 계속 싸우다 때를 놓치면 공멸할 수 있으니 잠시 싸움을 멈추고 일단은 그곳을 빠져 나와야 했다. 이제 한국경제는 얼마나 깊이 수렁에 빠졌을까? 19대 국회가 출범했던 2012년에 발목까지 빠졌다면 지금은 무릎 가까이 빠졌을까? 20대 국회는 경제회생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일 것이다. 여소야대에 내년에는 대선 일정까지, 벌써부터 정치 과잉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적어도 경제회생을 위한 제도혁신, 규제개혁에서는 고야의 검은 그림을 떠올리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2018년 8월, KDI 규제개혁 세미나에서 설문조사 결과



② 문제의 근본 원인 ... ‘잃어버린 10년, 한국은 제도가 문제다’

- 산업경쟁력의 약화는 원인이라기 보다는 결과적인 현상이며 문제의 근인(根因)은 생산, 투자, 고용, 계약, 혁신 등 기업과 국민의 경제활동을 규율하는 법제도의 문제에 있다고 보는 것이 생산적인 해법 모색이 가능할 것
- 제도는 국회에서 생성되기 때문에 **책임을 따지자면 여의도 정치가 주범:**
 국회는 지난 10년간 중대 전환기에 궁즉변(窮卽變)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을 놓쳤을 뿐 아니라 기득권 보호를 우선해서, 현실 안주와 초단기 영합주의에 취해서 법의 지배 원칙에 반하고 4차 산업혁명의 혁신을 방해하는 (불량/부실) 제도를 양산한 책임이 있다.

3) 토론자의 제언: 원인치료 방안 중심으로

- 산업의 위기,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대증요법과 원인치료 병행
- **대증요법은 행정부 소관이지만 원인치료는 여의도 정치의 소관, 책임이다!**
- 여의도 정치는 **역지사지(易地思之) 관점에서 경제제도를 재검토하라!**
 (내가 기업인이라면 생산, 투자에 관한 글로벌 전략을 어떻게 함이 합리적인가)
- 그리고 **entrepreneurship 경제학 관점에서** 규제개혁에 앞장서자!
- 노조... 그 돈 그 노력으로 ESOP 기업을 만들어 스스로 경영하라!

국회의원 이인선
국회의원 윤창현
여 의 도 연구 원

•



2023. 5. 4.

이인선 의원실(02-784-7610), 윤창현 의원실(02-784-2855)
바른사회시민회의(02-741-7660)

